

제349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6 호

국회 사무처

2017년2월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 1
- 1. 경제에 관한 질문 ..... 5

(14시03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 지금 이 시간도 안보의 최전방과 삶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입니다.

연인원 1000만 명이 훨씬 넘게 참여한 촛불항쟁이 시작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오늘로 정확히 두 달이 되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악의 대통령이 만들어 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저항이 6월 항쟁 이래 최고의 국민들에 의해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는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4·19 당시 경무대 앞에서 꽃잎처럼 스러져 가던 그날이 훗날 혁명으로 기록될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지금 100일이 넘게 진행되

는 촛불은 단순히 집회와 시위를 넘어서서 역사에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촛불시민혁명이 4·19나 6월 항쟁처럼 미완의 혁명으로 끝날지 성공으로 귀결될지는 앞으로의 일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외쳤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과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사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절대 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이 같은 역사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현재의 판결과 특검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고 최순실 일당과 함께 사법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태는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정농단 세력들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20대 국회에게, 19대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권에게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게 나라냐’라는 물

음에 답하는 일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지난 10월 29일 2만여 명이 첫 촛불을 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11월 5일 20만 명, 2주 만인 11월 12일 100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연 참가인원이 1000만이 넘어선 이 사태에 우리도 놀랐고 전 세계가 함께 놀랐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불씨를 던졌을 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화물질로 가득 찬 화약고였습니다. 바로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인화물질 말입니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철부지의 철없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를 고발하는 '99%를 위한 경제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위니 비아니마 옥스팜 총재는 '한국의 촛불시위는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된 경제 사건'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부모나 원망해야 하는 대한민국, 돈이 실력인 대한민국은 우리만 아는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는 현재 지구촌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입니다.

다보스포럼이 최근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는 경제 불평등, 세계 양극화, 환경위험 증대를 향후 10년 지구촌을 위협하는 3대 위험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째 지속되고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위험입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통화기금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20년 동안 비정규직 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심지어 노인범죄율에 이르기까지 각종 양극화 수치가 악화되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유례없이 빠르고 완강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첫째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둘째 기회균등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승계되는 통로로서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불공정한 경쟁과 정책결정을 통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까지 연루된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야말로 특권, 불법, 반칙으로 점철된 불공정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옥스팜에 따르면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 등 18명의 부자가 전체 국민 소득 하위 30%와 비슷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18명 중 11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였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강제모금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간의 정황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뇌물을 제공하고 여러 형태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은 바로 이 같은 현실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외침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그동안 누적된 극심한 불평등, 그 불평등이 불공정의 결과라는데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정농단과 불평등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과 오찬을 하고 7명의 재벌 회장과는 따로 독대를 하여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합니다. 재벌들은 이에 따라 출연금을 내었고 곧이어 8월 6일 박 대통령은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노동 개혁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전경련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그 며칠 후에는 새누리당이 소위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500억 가까운 자금을 출연받은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10월 27일, 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 개정 등 대표적인 친기업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의 자금을 출연받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대통령은 또다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바로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러한 재벌들의 정부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해 온 부끄러운 째짜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재벌 회장들은 특검으로 출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재벌의 공조로 만들어진 이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 온 새누리당과 범여권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재벌의 정부입법 관철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박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하여 벌여 온 모든 행동들이 이제 사법 처리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정부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도에 따르면 구속 중인 안중범 전 청와대 수석이 지난 특검 조사에서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 등 세 상임위원회에 삼성그룹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합니다. 당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야당 의원들이 삼성그룹 임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안중범 전 수석은 당시 여권 인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실제 새누리당 반대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박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교문위의 삼성그룹 증인 무산은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출연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임원에 대한 증인 채택 방해행위 자체가 뇌물을 공여한 삼성이 얻은 대가라는 해

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감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께 2월 임시국회에서 가칭 ‘국회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진상조사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정치권 모두가 그간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근본 배경이 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실천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의지를 정권 차원에서 보여야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8일 1900명의 일본 경제계 대표들을 앞에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쉬운 해고나 성과연봉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며칠 전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여야가 힘을 합하여 처리합시다.

쌀값 폭락과 농산물 수입, AI 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연간 500만 원 미만의 농업판매수입을 가진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보호 확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 농정 개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세대를 건너뛸 손자·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

수저의 손자·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서셨던 각 정당 대표들께서 주요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2월 국회의 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국회는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개혁 입법을 관철시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치 개혁의 상징인 선거연령 18세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만 18세면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18세 청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유독 투표권만은 못 주겠다는 말입니까? 지난해 4월 13일 총선에서 대학교 1학년 학생 중 80%가 만 19세 이상만 투표권을 주는 현행 법률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0년 전 유관순 열사는 고등학생인 16세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의 18세는 왜 대학생인데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영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는 이미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8세 참정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2월 국회가 합의하여 꼭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재벌 개혁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정경유착을 일삼아 온 재벌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될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2월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모두 필요한 법률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입법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벌총수들의 편법적 세습을 저지하고 총수들의 지배력 집중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또 다른 몸통 중에 하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산은 현재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막대하게 부풀리기 위해, 아니 사실상 세습받기 위해 그가 낸 세금이 얼마입니까? 1996년 이견희 회장으로

부터 물려받은 6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6억이 전부입니다. 똑같이 부친으로부터 3000억의 주식을 물려받은 중견기업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상속세로만 1500억을 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이 땅에 경제정의라는 단어마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당시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은 2015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어처구니없는 합병에 동의해 줌으로써 그 끝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모자라 삼성은 소위 인적분할과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일반 국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방법으로 수백조 원대의 그룹을 통째로 세습하는 마지막 단계를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다른 재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세습 지배구조 확립을 이뤄낸 상태입니다.

삼성이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편법적 승계를 저지하고 다른 재벌들이 이미 저지른 편법적 지배권 확립을 무효화할 법안이 민주당의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을 통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2월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국회특위 설치,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로 인해 생존권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권 마지막 국회에 임하는 우리 20대 국회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제 연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 논의가 더 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대통령 권력의 분권을 주장합니다. 개헌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복지국가들을 만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

의 지지가 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지향이 정치에도 정확히 반영되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개헌특위가 설치되어 맹렬히 가동 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이기 이전에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영국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뜻이 우선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나섭시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노회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경제에 관한 질문

(14시2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윤후덕 의원입니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대한민국의 공동체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국정은 선출되지도 않고 임명되지도 않은 비선실세에 의해 농락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에만 집착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

임 있는 자세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부총리님 나오시지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후덕 의원 총리께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로서는 권한대행께서 아직 국정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피력하지 않고 국정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만약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면 부총리님께서 책임을 지시게 되는데 직함이 어떻게 변경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현재 제 직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아마 전 세계 헌정사상 그야말로 유일한 상황이 유일호 장관에게 맡겨질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마음의 준비나 각오가 서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한대행께서 아무런 그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무슨 각오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의원 힘드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하는 지금 경제 상황을 살피는 일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국정 운영에서 여당이 차지하는 책임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후덕 의원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탄핵소추를 앞둔 대통령을 출당시키지도 못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탈당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여당이 그냥 이름만 존속하고 국정표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월 8일 날 여야정 경제정책협의체를 개최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 뒤에 했습니까? 좀 성과는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직까지 그 다음 회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정당하고 계속 정책 협의가 안 되고 그냥 표류하고 있는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표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하여튼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소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법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야 3당 의원님들 또 각 당의 정책위의장님들하고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회의가 곧 필요하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어제 강북구 수유시장에 가셨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갔었습니다.

○윤후덕 의원 거기서 2월 중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윤후덕 의원 정부 혼자 대책 마련하지 마시고 반드시 국회·정당에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를 요청하셔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요청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단 아직 전반적인 열개 정도이고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협의회도 할 것이고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여야 각 당에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예, 그래서 국민에게 더 신뢰를 주고 또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성장 추세에 돌입했습니다. 그 추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KDI가 경제전문가 조사를 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4% 정도 된다고 전망을 했어요.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하시고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올해, 그러니까 2017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6%로 그것을 수정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제출할 때 3%였는데 그것을 2.6%로 낮춘 것은 그만큼 현 2017년도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낮춘 것이고, 이것을 낮춘 것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길게 봤을 때 저성장 추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의원 예,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자, 지난 임시국회에서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께서 ‘추경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해라’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근거를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 그 당시 김진표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의원님들이 빨리 추경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것은 일단 저희가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1/4 분기는 추경이 없어도 사실 재정의 조기 집행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1/4 분기에 지표라든가 상황이,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이 수치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지표만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 바로 판단을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청년 일자리 등의 예산편성을 다시 하자는 요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다 합쳐서 부총리께서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대외 불확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적인 불확실성이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1/4 분기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선제적인 추경 편성이든지,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야 하니까 국회에 와서 논의하고 해서……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좀, 적어도 1/4 분기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금년에는 유난히 대외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할 계획이지요? 혹 거기에 우리가 낄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현재의 법상으로는 3개의 조건이 있고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2개에 해당이 되고 하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본다면, 형식 논리상으로 본다면 저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다른 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범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지정된다든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의 간접적인 영향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중국의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비관세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아마 그 당시, 사실은 현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중국이 '이것이 사드 관련 조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관세적인 장벽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이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공식

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사드와 관련되어서 부당한 조치가 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당당하게 그것에 대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중국이 이것은 사드와 관계 없이 국내법의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로서는 우리가 나서서 그것이 사드와 관련된 것이니까 이걸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국내법의 절차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윤후덕 의원** 지난번 답변을 내가 요약하면 이렇게 합니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역보복은 어렵고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복은 나름대로 노력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정말 정부가 노력하면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복은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의 효과가 전혀 없게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은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몇 가지 조치, 예를 들면 롯데가 하는 롯데월드 공사가 중단됐다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회사도 그것이 사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몇 가지 그런 조치들이 과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저희가 노력하는 경우에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려가 됩니다. 상당한 심리적 동요를 우리 시장에서 하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해하지요.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비관세 보복은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한미 간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 경제부처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저희로서는 사드 배치의 결정은, 그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결정으로 이미 나와 있었고, 아마 그것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이나 이런 유의 문제가 생길 것이

다 하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제부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의견 개진한 적은 없습니다.

**○윤후덕 의원** 부총리께서 롯데 기업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위기를 맞게 되면, 사드 포대 부지를 맞교환 하는 것이 결정될 때 중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게 심화되면 그 상황은 무역 보복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썄 제가 그것, 중국이 만약에 부지 배정이 결정이 났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양시의 롯데타운 공사 중단 이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또 어떤 조치가 더 있을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일 때는 저희로서는 당연히 또 당당히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중국도 국내법이 있다는……

**○윤후덕 의원** 지금 말씀하신 국제기구라는 것은 WTO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WTO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자간 기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의원** 거기에,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WTO 규범에 위반이 되는 경우라면 저희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아무런 그런, WTO 규범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지금 지레짐작을 하고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저희로서는 당당히 제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은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 변수 중에 또 염려되는 것이 미국의 금리인상입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은 뉴욕사무소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

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일반적으로 IB를 포함한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3월보다는 6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그 확률을 매우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어쨌든 올해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 당국은 통화 당국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외환시장이라든가 또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은 여러 섹터에 있어서 그것은 강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실제 걱정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우리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정책 판단과 그 인상의 속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윤후덕 의원** 어려워요, 답변하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금리에 관한 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언급을 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후덕 의원** 또 큰 문제가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13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곳이 다중 채무자, 그러니까 취약 대출이지요. 그리고 자영업자 부실 고위험 대출 이런 것들로 정책 당국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과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크게 봐서, 물론 규모가 매우 큼니다. 매우 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봐서 부채의 질적 문제는 그런 대로 아직은 양호합니다. 상환율이라든가 연체율이라든가 또 그것이 대부분 주택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그야말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원님이 지금 지



적하신 바와 같이 서민계층 또 취약계층 그리고 거기에 청년·대학생 이런 층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쪽은 굉장히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차례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것은 역시 서민금융 지원, 낮은 이자를 통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또 서민 중심 정책모기지를 개편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것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청년·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맞춤형 서민금융도 확대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아마 근본적으로는 경기 대책, 성장과 가계소득 대책, 소득 증대 이것이 되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몇 가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하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러면 이번 2월 중순에 발표하겠다는 대책에도 포함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마 조금……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다음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해운산업 몰락 최순실보다 더 큰 죄’라는 제목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양수산부를 폐지했지요. 장관들은 4대강 사업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해운업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실례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127억 불을 선박 지원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머스크라인 등 해외 선사에는 85%에 해당하는 108억 불을 지원한 반면에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국내 선사에는 15%에 불과한 19억 불밖에는 지원하질 않았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라인은 42억 불을 지원받아서 엄청난 배를, 최고의 배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치킨게임에 돌입했습니다. 결과는 국내 금융을 가지고 국내 조선소에서 지은 배로 인해서 국내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괴멸했습니다. MB 정부의 저주지요, 우리 해운업에 내

린.

박근혜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가 부활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선사에 대한 정책 지원은 커녕 구조조정 원칙마저도 개별 기업과 채권단의 자율협상에 맡겼습니다. 아주 잘못된 원칙이지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해운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의미와 역할 차원에서 구조조정 원칙이 세워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8월 29일, 채권단 결정을 사전에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관계장관회의를 해서, 지금 이미 현대상선에 대한 조치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누차 저희는 몇 차례 관계장관회의도 했고요. 또 차관, 실무라인에서도 또 했고 그래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윤후덕 의원** 경제장관회의를 한 게 며칠입니까, 작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냥 관계장관회의를 한 것은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한 것이 8월 31일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이른바 현안점검회의……

○**윤후덕 의원** 아니, 8월 31일이면 법정관리 신청된 날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이후입니다.

○**윤후덕 의원** 종료된 이후에나 경제장관회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현안관계장관회의라고 해서 그전에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의원** 그전에 몇 월 며칠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6월에도 한 번 하고 4월, 5월에도 한 번 했을 것으로……

○**윤후덕 의원** 아니요, 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저희가 과거에 이른바 서별관회의라는 것도 있었고 아마 그런 형태인 것인데, 현안관계장관회의는 정말 아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어서 기록을 지금까지 남겨 놓지를 않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기록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

고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장관회의……

○**윤후덕 의원** 부총리께서 지금 근거 없는 증언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닙니다.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는 과거의 서별관회의라는 것도 그렇게 무슨 기록을 남겨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저희가 이것을 관계되는 장관들이 모여서……

○**윤후덕 의원** 아니, 경제장관회의를 했는데 기록을 안 남기다니요? 날짜도 안 밝히고. 그런 경제장관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시 말씀……

○**윤후덕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윤후덕 의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무효입니다. 문형표 전 장관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하고 있지요? 유죄 판결이 나면 이 양반의 잘못된 지시에 의한 이 합병은 무효가 되는 거지요?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건 재판 과정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판 과정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시가,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이 아마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윤후덕 의원** 특검에서 대변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의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마치 특검은 경제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정의가 아니라 경제를 선택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국가경제는 정의, 경제 정의가 바로 설 때 제대로 그리고 튼튼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의견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경제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의원** 좀 길게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의원님, 그 영장 기각에 대한 판단을 저에게 구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정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이 세상을 경제라는, 우리가 흔히 아마도 효율성 문제라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형평성, 정의라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 양자가 다 중요하고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후덕 의원**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완전 중지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제 고향에서 개성공단까지는 대리운전으로 1시간, 대리운전으로 1만 원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빨리 재개되어서 남북 상생의 기틀이 다시 다져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 출신의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자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서민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생활이 정말 팍팍하다, IMF 때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퍼펙트 스톱이 한국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며 연일 우리 경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니면서 말고 식으로 4월 위기설, 외환위기 재림설 등과 같이 경쟁적으로 위기론을 설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경제에 대한 선부른 낙관이나 과신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정말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 IMF 사태와 같은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시는지, 국제기구 등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보는 것이나 국제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나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당시에 20년 전의 IMF 사태하고는 지금의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몇 가지 지표상 비슷한 것,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할 텐데,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세 자체가 그래도, 물론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정적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양호한 대외건전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시다만 재정여력이 지금도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의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어려운 요인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추경호 의원** 어려운 요인, 위기 등과 관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기업의 산업생산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2017년의 경제 상황을 본다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견히지 않은 것이 많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국내에는 낮은 소비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의 부진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은 다 어려운 요인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 결국 종합하면 본 의원은 당장 IMF 사태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구조적인 취약 요인 때문에 시급히 뼈를 깎는 강도 높은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조적 위험요인이 커지면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할 경우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같은, 더군다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많이—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저

하된 상태에서 이 구조가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일본 식의 장기불황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경제로 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 개혁은 정말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의원** 경제부총리께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함으로써 위기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추경호 의원** 최근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신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부총리께서는 미국의 경우 TPP 탈퇴, NAFTA 재협상 요구 등을 하고 있는데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이 있는지, 여러 형태의 통상 압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현재까지 한미 FTA 재협상의 문제는 미국 측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TPP라든가 NAFTA 재협상 그런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우리 한미 FTA 협상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니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드누신 재무부장관이 아직 인준을 못 받았습시다만 인준을 받는 대로 전화통화라도 하고, 또 저희가 3월 달에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장관 레벨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실무 레벨에서 많은 접촉을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라든가 많은 경제부처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고 외교부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사실 한미 FTA라는 게 분명히 양방향, 양쪽이 다 윈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는 것과 아울러서 좀 더 가시적인 조치도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외환시장 여쭙 보겠습니다.

미국의 약달러 정책으로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

중국·일본 등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 외환시장 안정책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조작국의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른 나라를 하다가 안 되면 한국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또는 그 기준을 바꿔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투자를 한다든가 또 셰일가스를 수입해서 우리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와 같은 방안으로 대책을 하면 그것이 실효성 있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우리의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다음 금년도 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경제 전망이 어떤지 상·하반기별로 구분해서, 그리고 내수·수출 등 부문별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2.6%로 하향조정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내수입니다. 내수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가 특히 그 영향이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달 통계를 이미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내수 문제가 있고요.

다행인 것은 수출은 그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1월 달에 그와 같은 대규모 수출 증가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반등하고 있고 또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수출 쪽에서는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 수출도 다시 증가하는 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상반기에 내수가 부진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내

수가 어느 정도 상황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로서 가장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역시 재정 정책이라고 보고 그래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아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반기에 가면 그것이 조금 내수에 도움이 되면 내수도 다시 올라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수출은 연간 꾸준한 흐름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낮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연간 2.6% 성장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수출보다 내수가 힘들다 그러셨는데 내수가 힘들면 서민들 민생경제 더 안 좋게 됩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복안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시정책 전반적으로 보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재정이 가장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늘리려면 역시 길게 봐서는 성장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요한데 그 중간이라도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것 또 소비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심리 회복을 위한 것이 저희 민생 안정 대책에 상당 부분이 들어갈 것이다, 그 대책으로 민간 측에서의 소비심리와 현실적인 소비의 증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수의 또 한 축인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예를 들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상향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예, 내수 진작을 위한 거시정책으로는 아마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이 벌써 금년에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힘들고 자금 이탈 등 외환·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사실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사실상 당분간 통화정책은 발이 묶인 셈인데 그렇다면 결국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작년 추경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과 국제 수입 증가율이 각각 어떻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2017년 총지출 예산이 400조

원인데 이것은 작년 추경 대비하면 0.5% 증가입니다. 그리고 국세 수입예산은 작년도 국세 수입 예산이 작년 추경 대비로는 4.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약 9.8조 원, 거의 확정된 치가 9.8조 원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그러니까 작년 세수는 추경 당시 전망보다 약 10조 더 들어왔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셈이 됩니다.

○추경호 의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금년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월 달 확정치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세수가 작년같이 그렇게 예산 대비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2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은 조심스러운 예상이고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경호 의원 종합해 보면 올해 예산은 지출 증가율이 0.5%로 국세 수입 증가율 약 4%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국세 수입은 추경 당시 전망보다 약 10조 원 더 들어왔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5조~10조 원 정도의 초과세수가 예상됩니다. 결국 금년도 예산은 세수에 비해 적게 쓰는 것으로 편성되어 확장적 재정 운영이라기보다는 긴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이 5조~10조 원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으로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1월 달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의 초과세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2017년 자체도 예산의 초과세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적자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의원 내수 침체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대선주자도 집권하면 바로 추경 편성하겠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경 검토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1/4분기의 경제 상황을, 지표가 그중 중요한 것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으로서 중요시하는 것은 실제로 조기 집행을 굉장히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적어도 1/4분기는 추경과 무관하게라도 재정은 굉장히 확장적으로 집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의원 1/4분기 지표 언제쯤 나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1/4분기는 3월, 물론 잠정치는 4월 초면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개 아마 그 정도면 잠정치가 확정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추경호 의원 대개 3월 지나면 4, 5월경 아마 지표들이 나올 텐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대로 확정치가 나오려면 5월까지도 갑니다, 어느 지표는.

○추경호 의원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4분기 지표가 다 나온 후에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경우 국회 제출은 상반기가 다 지난 후가 되어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치일정 눈치 보다가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추경 편성에 착수하여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이루어져서 5, 6월 경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추경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미리 살펴보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이러한 분야에 하겠다는 것을 낸다면 그러면 추경 편성을 위한 시간도 많이 절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의원 본 의원도 추경은 할지 말지 판단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 과제는 또 일자리 부족, 실업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상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사실은 현재 전체 실업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저희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도 없이 작년엔 10%, 9%, 최종 9% 레벨에서 결정이 됐다는 그 자체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고 정책 당국자로서도 참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부분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추경호 의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당 대선주자 중에는 4대강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재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 22조만 있으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단순 계산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은 연간이고요.

**○추경호 의원** 한 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일 자리를 만들면 일자리는 지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추경호 의원** 예, 본 의원은 이러한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 후에 1년 뒤에 전부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면 무려 1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결국 공공부문 100만 개 일자리는 예산 22조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1100조 원이 드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제안 자체에 대한 말씀보다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민간부문에서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공부문이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맞습시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그것의 어떤 보완의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의원** 예, 이런 약속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사업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는 주로 민간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하려면 기업이 마음껏 뺄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 등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즉 리쇼어링(reshoring)을 비롯해서 외국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려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는 유턴 기업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 같은 것 또 관세도 좀 감면하고 고용보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예.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부총리, 주요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로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든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 현장에서의 문제는 노동, 이른바 우리가 흔히 노동 4법·3법 하는 노동 관계 법령들 이외에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낙후된 우리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 의원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데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회에 5년 이상 계류되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많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벌써 5년째이고 많이 논의가 됐는데 아마도 여야 간에 그 당시에 그 정도로 현재도 문제가 된 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 이런 것은 이미 상당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의료법이라든가 건강보험법이 개별법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전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호 의원 이 법안이 채택을 갖고 있는 법안입니까, 당근이 들어 있는 법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 법안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당근이 매우 많은 법안입니다.

○추경호 의원 예, 그렇다면 계속 야당 등에서 반대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여 다른 서비스산업 분야만이라도 먼저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차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는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게 아주 굉장히 앞으로의 잠재성이랄까요, 이런 표현을…… 산업으로서의 발전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정부로도 그렇고 법안의 내용으로서도 이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 보장이 되면 꼭 좀 같이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호 의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차선책을 언급했습니다만 만약 차선책이 논의된다면 이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이 지체되는 역사적 책임은 이를 주장한 정당과 의원 및 단체가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추경호 의원 조금 전에 야당 대표께서 재벌의 청부입법 운운하셨는데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것은 재벌 기업들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 법을 만들 때 정부하고 지자체가 합동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의원님 잘 아시지만 각 지역의 2개씩의 전략산업을, 말하자면 보험업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야겠다 하면 중앙정부가 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 법안을 마련했지요. 그 당시 여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공동 발의해 주신 법안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해당 광역단체장님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국회에서,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호 의원 청부입법 아닙니까, 확실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청부입법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뭐……

○추경호 의원 지금 대선 주자들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청년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바로 이런 취지에 딱 맞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부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결코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 한 치도 앞이나갈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그분들의 희망을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 그런 법안입니다.

○추경호 의원 정치권에서는 동 법안에 대해 전혀 근거 없이 청부입법 운운할 것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비록 정치는 혼란스럽지만 경제만큼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 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권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조기 대선에 경도되어 당리당략적인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인기영합적 정책을 통해 돈을 쓸 궁리만 하거나 더 많이 쓰기 위해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킬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성장을 어떻게 지속하고 국부를 축적할지,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구상과 함께 기존의 복지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정비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단순히 경제가 걱정된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가치 논쟁에 빠져 아무런 성과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행태를 버리고 심도 있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어떻게든 발 빠르게 정책 대안과 입법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말만 많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정치 상황에서 탈피합시다. 정치도 국회도 이제는 생산성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생산성 높은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저 자신부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세균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수많은 경제정책을 발표했고 연간 4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창조경제라는 허구에서 시작을 했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속에서 제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굉장히 출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권한대행께서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출마하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오늘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지금 민생 전반 또 국가의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그러면 부총리로서 만약에 황 권한대행이, 황 총리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대선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계 이어받게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김관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쪽 말기 굉장히 뻣뻣하실 텐데 비경제 부분까지 같이 맡아서 이렇게 할 경우에 자신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다, 없음을 말씀드릴 계제가 아니고요. 아직 어떤 분명한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치권에도 계셨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의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황 총리께서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것 역시 분명한 어떤 기준을 내지 않았는데 제가 대행의 앞으로의 행위에 대해서 미리 그것이 옳다, 그르다 재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영 의원 부총리께서도 속으로는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황 총리께서 이 정부, 박근혜정부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같이해 온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도 지금의 각료들이 모두 어떤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의 어떤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의 판단이 아니고 지금 국정이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동책임은 정부 각료들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순히 지금 대행께서 법무부장관, 총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국정의 모든 것에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만 뭐 국정이 잘못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 의원**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 지금 황 총리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썄, 그 측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관영 의원**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서 장관하고 지금 총리까지 하면 그 이상의 측근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측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직위와 위치가 그런 대통령의 바로 다음 자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무슨 대통령의 모든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같이 가는 측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 의원** 부총리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심으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총리에게 기회가 되시면 진솔하게 건의도 하시고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경제성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김관영 의원** 그러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금 거의 다 이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마무리……

**○김관영 의원** 3년 다 됐는데요, 점수 100점 중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이것

을 점수로 하기보다는 이룩한 것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문 개혁 같은 것은 그래도 상당히 저희가 성과를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다른 4대 부문 개혁도 성과를 낸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저희는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다만 거시경제 지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장률을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도 많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 의원** 지표는 당초 목표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몇 가지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때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소득증가율이 역대 정부 들어서 가장 작습니다.

그다음에 또 몇 개의 재정지표에서도 각 3개, 박근혜정부·MB 정부·참여정부를 비교를 했습니다. 뭐 다른 정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 없는 점수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 이 부분도 지나치게 급격하게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절대액으로 보시면 당연히 지금 재정 규모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의 그 절대액의 증가는……

**○김관영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어 볼게요.

국가부채가 절대적으로 증가폭은 커졌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대한민국의 GDP가 그만큼 커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우선 증가폭으로 본다면 대개 한 10%, 지금 박근혜정부는 아마 올해가 다 끝나 가면 그게 정확히 나오겠습니까. 10% 정도의 부채 증가가 매 정권마다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는 그런 것. 그래서 증가율로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보다는 비슷한 수준이다 하는

것이고요.

국민소득의 증가는 지금 1인당 GDP, 소위 이른바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올해도 2.6%, 작년에 2.7%를 달성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경제성장률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따져 본다면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굉장히 다른 것이 다……

**○김관영 의원** 제가 경제부처에 계신 분들한테 여쭙 보면 항상 외부요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부총리께서도 주요한 경제지표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김관영 의원** 제가 보니까 잠재성장률도 4%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6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만 7000, 2만 6000에서 2만 7000 겨우 1000달러 늘었어요, 4년간.

자, 그러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3년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달성이…… 적어도 경제지표에 대해서 달성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노력했던 것에 구조적인, 예를 들면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금융부문의 개혁 이런 것은 달성을 했고 아마 그것의 효과는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환율이, 환율도 경제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만 환율 자체가 최근에는 매우 달러에 비해서 약세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원화 표시보다는 성장률이 낮은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의원님이 해외요인이 나쁘…… 자꾸 그 핑계를 대느냐……

**○김관영 의원** 환율 말씀하셨는데요. 환율 약세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의심 받고 있어요. 그러면 환율 때문에 1인당 GDP가 약평가가 되어 가지고 낮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환율을 가만히 떨어지게 놔두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조작하고 있어 가지고 환

율을 고환율로 유지한다. 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그것은 의심이고요. 저희가 환율에 지금 그런 식의 조작을 안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관영 의원** 1년에 수백억 달러의 흑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환율은 안 떨어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요새 그것이 최근의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이 과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김관영 의원** 미국 환율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관영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요, 의원님.

**○김관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고 미국도 환율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환율 당국의 담당자들이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환율을 그런 식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율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경상수지의 폭 이런 것보다는 안전자산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이 납니다. 불행히도 우리 원화는 안전자산이 상대적으로 아닌 것이고 세계적으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외환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미국의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인데 그것이 지금의 환율 결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고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환율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러나……

**○김관영 의원** 자, 거기까지 들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관영 의원** 그러면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차기 정부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우리나라 경제 도약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구조 개

혁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달성을 못 하고, 끝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달성을 해야 된다. 구조 개혁의 미시적인 것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산업별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체질의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 의원** 부총리께 제가 꼭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백서를 꼭 준비해서 만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인수위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대선 끝나면 바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과거 경제정책 특히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 양심 있는 평가도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백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다시금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백지화된 경제민주화 공약입니다. 이 정부가 지나치게 친재벌정책을 많이 했어요, 뒤로 돈 걷고 특혜 주고. 또 하나는 갈 지(之)자 경제정책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서 당초 세운 경제정책의 방향이 매번 흔들렸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일주일 전마다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 보시고 백서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이 백서 형태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희들 3개년 계획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제민주화가 백지화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실지로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지금 기존의 순환출자를 다 그것은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러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재벌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배구조의

문제인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업적을 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관영 의원** 제가 백보를 양보해서 공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기재를 하시고 과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솔직하게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서는 아닐지 몰라도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꼭 바로 시작해서,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군산조선소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조선업,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크를 지금 31개에서 7개를 줄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3% 정도의 도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각 도크를 폐쇄함에 있어서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게 될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얻게 되는 비용절감분이 금융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46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군산 도크를 폐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분이 460억이다.

그런데 군산조선소가 폐쇄됐을 경우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약 5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받게 될 실업급여가 얼마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670억 정도 됩니다. 현대중공업에게만 이 결정을 맡겨 놓으면 실업급여가 얼마 나가는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오픈한 이후로 여기에 조선학파가 주변 대학 4개가 설치됐습니다. 지자체가 500억을 지원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관영 의원** 현대조선소 2016년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것은……

○**김관영 의원** 잘 모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좀……

○**김관영 의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적자일 것 같습니까, 흑자일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현대조선소는……

○김관영 의원 현대중공업.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중공업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어떻게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관영 의원 놀라지 마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조선만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놀라지 마십시오. 현대중공업이 작년 영업흑자가 1조 6000억 났습니다. 비용절감 460억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군산조선소의 도크를 폐쇄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 균형발전에도 그렇고요. 사회적 비용, 기업이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때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이 부분을 고려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은…… 예,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진짜 정부가 상당히 정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고려의 결과가 어떤 정책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김관영 의원 군산조선소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도크가 폐쇄된다는 데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관영 의원 그 경우에 협력업체가 다 문을 닫을 경우에 약 2조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대중공업은 460억 자기들은 절약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은 완전히 폭탄을 맞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김관영 의원 정부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로 든 실업급여 같은 것은 당연히 이미 있는 것입니다만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도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정부의 사회적 비용에 의해서만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에 의한……

○김관영 의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 말씀입니다.

○김관영 의원 좀 지혜를 모아 잡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박근혜정부 4년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저희들은 실패의 교훈을 꼭 건져야 합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차기 정부의 과제를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관료들에게도 요청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단지성을 모아 주십시오. 경제의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 출신의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바른정당 소속 김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성공을 가능케 했지만 내일을 위한 도약에 발목을 잡고 있는 대기업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경제구조의 변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기간 가장 중점을 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기술혁신과 창의적 도전정신에 기반한 기업가 정신의 육성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랬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金世淵 의원 그 결과 2015년 4분기에만 88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2009년도에 30개가 안 되던 것이 2015년 말에 170개가 되도록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도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세계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3%대 성장을 할 정도로 성장엔진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또한 실업률을 봐도 취임 이듬해에 9.8%였던 실업률이 퇴임 직전에는 4.7%, 거의 현실적으로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의원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사례를 들었던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보면 1위가 슈퍼히어로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처럼 동심에 젖어서 이런 답을 했을 건데요, 스파이더맨이 1등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소방관, 경찰관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 작년 초에 공개되었던 통계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들한테 가장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물으니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다.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공무원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러리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金世淵 의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金世淵 의원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계속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가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합격자는 5103명입니다. 따라서 22만 5000명 이상이 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또 학벌, 학점, 영어 점수, 해외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봉사활동, 인턴 경력에 이제는 스펙 쌓기 중에 성형까지 들어가는 이런 스펙 쌓기에 지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는 도전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창업에 나서 보려고 하지

만 이 역시 자갈밭이고 또 가시밭길입니다.

평범해지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도 결국에 평범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비통한 현실입니다.

세계가 함께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청년들만 더 어렵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리나라 청년만 유독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표로 비교를 해 본다면 청년 실업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10%로 또 한 번 뒤편고 10%에 가까운 9%를 넘는 청년 실업률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것은 남의 나라가 어떻다를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꼭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의원 바로 인근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창업에 대한 한중일 3개국 대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일본의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일하려고 창업을 꿈꾼다’ 하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은 나중에 제가 드릴 이후의 질문과 연결되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꼽아 보라니까 중국의 대학생들은 ‘아이템 부족’, 일본은 ‘정보 부족’ 이렇게 꼽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꼽았습니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발표한 2017년 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서 국가 경제 규모 및 발전 정도에 훨씬 못 미친 27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대만 이런 나라들보다도 낮은 순위입니다. 또 87년 이래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등수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즉 학교 다닐 때 가장 똑똑하고 본받고 싶은 선배들이 창업에 나섰다가 몇 년 후에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젊은이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창업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년창업이라는 것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마는 한 번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이 영영 재기를 못 할 정도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연대보증,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이라는 것도 있고, 3자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이것도 상당히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정말 재기를 불가능하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제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것이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의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적어도 용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연대보증을 폐지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용등급 5급에서 7급으로 더 확대하겠다 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면제를 확대는 하는……

**○金世淵 의원** 듣고 있는데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게 또 어찌 보면 연대보증 자체가 자금에 대한 자금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면제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안의 보증 기구가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그 지적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金世淵 의원** 중기청의 TIPS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의원**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데, 스타트업에 대해서, 선발된 창업팀에 민간 투자하고 정부 R&D를 연계해서 지원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창업팀을 선별을 하면, 뭘 투자를 하면 정부가 R&D라든가 그 외에 상응하는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게 되겠습니다.

**○金世淵 의원**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대적으로 기술 창업을 장려하는, 추진하는 제도들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의원** 바로 그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제도라는 것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바로 그렇습니다.

**○金世淵 의원** 그런데 중기청에서 원래 설계한 정책대로 TIPS 프로그램에 참여한 엔젤투자사의 대표가 중기청이 정한 지분 취득 범위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취득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지분 편취 혐의로 이 투자자를, 창업자 출신의 투자자를 구속 수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金世淵 의원** 결국에 법원에서 무죄로 밝혀져서 풀려났지만 이 역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볼 때는, 특히 이 기업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곳에 투자하고 하는 세계적인 무대를 활동하다가 조국의 후배들을 위해서 들어와서 이런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대로 하다가 구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업의 열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게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 당사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하던 방안대로 이 회사 저 회사 필요할 때, 뭘 만하면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인신 구속까지 간, 물론 무죄가 나와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이게 제도 개선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겠고요. 이것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 제도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의원** 화면을 잠시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이 나오는데요. 현재 중기청의 TIPS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사업 설명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봐 주시지요.

이것이 2015년도에 게시되었던 그림입니다. 차이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조금 확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을 보시지요.

확대를 해서 보면, 2015년도에 있던, 즉 투자 15% 그리고 지분을 투자한 지분 대비 2배 내외로 받게 하도록, 즉 정부가 매칭 투자를 따라 들어가는데, 민간이 선도 투자하면 정부자금이 매칭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투자자에게 조금 더 많은 투자 성과가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받은 회사는 또 정부의 R&D에 성공하게 되면 기술료로 일부를 정부에 또 상환하도록 이런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도대로 따라갔는데 검찰이 이 기업가를 구속했을 때는 중기청 홈페이지 그림에는 두 번째 그림은 없어지고 첫 번째 그림이 올라오면서 제도 설계 자체가 초기와는 변형된 상태로 올라와 있었고 중기청에서는 이런 명백한 정부의 임의적인 정책 변경에 대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변호는커녕, 이 창업자들을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변호도 하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중기청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못 받았습시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검찰의 판단은 지분을 과다하게 받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이 난 셈입니다마는, 만약에 그 변화된 것을 제대로 중기청에서 설명을 안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의원** 산자부장관께도 제가 좀 이따 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을 바꾸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국제

적인 활동을 하다가 귀국해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신뢰하고 투자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창업 열기는 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金世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방금 부총리께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특히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소관부처인 중기청에서 발생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청이 TIPS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설명했던 부분하고 또 실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의원** 제도상 개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었고요 정부가 처음에 설계한 대로 정부를 신뢰하면서 따라간 그 투자업체들이 이것을 믿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검찰 수사에 의해서 구속까지 당하는 봉변을 당했는데, 이것은 제도 개선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장관님이 답변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사안별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정세균 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金世淵 의원** 예, 그래서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또는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야 할 것인데 실제로 이 TIPS 프로그램이 성공을 한 이후에 이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아주 지방의 한직으로 지금 밀려나 버린 상태고 또 후임자들이 들어와서는 전임자들의 성공적인 정책을 애써 외면 또는 무시하려는 이런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꼭 개선 방법을 찾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의원**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여야 합니다. 실패라는 벽에 막혀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꼭 수행해야 될 책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심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중구성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구성원이 빈곤하고 비참한 사회는 절대로 풍요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조셉 스티글리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공평하지 않다면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최근에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이 문제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벽과 그 차이, 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에 암덩이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더 심화돼 왔습니다. 아니,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난 9년 동안 심화·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면 근대 자본주의가 지속적인 빈곤에 대해서 해결책을 거의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계속 심각해졌습니다. 수십억 명의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

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초래된 사회적 비용을 국민 대다수에게 그리고 사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환경과 천연자원은 남용되거나 파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순환과 경제 불안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점점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경제는 생산보다 제조업보다 금융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의 결탁은 더 은밀해지고 더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안전, 과대광고, 불공정 경제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GDP 성장에만 치중하지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고 나누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화가 우리 사회의,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보시지요.

정부 4년 평가 준비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부 4년의 평가를 따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처도.....

○**홍익표 의원** 최근의 언론 보도는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홍익표 의원** 최근의 언론 보도는 뭐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어떤.....

○**홍익표 의원** 박근혜정부 4년의 성과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부 4년 전체를..... 경제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체 다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익표 의원** 그러니까 하면 기획재정부도 할 것 아닙니까, 경제부처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마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 오면 그것에 대한, 경제 분야에 대한 것은 좀 내용이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부문 개혁 같은 것은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지표상으로 성장률이 낮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선방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도 반영이 일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의원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그 전날까지 좋다가도 부도가 나면 그다음 날로 떨어뜨리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지요.

표를 한번 보시지요, 그림을.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성장률, 역대 정부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나쁘지요, 성장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자랑하시듯이 대답을 하시네요.

그다음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홍익표 의원 국가채무 빠르게 증가해서 노무현 정부 때 300조가 안 되던 게 이제 64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8.7%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도 물론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보면 7.1%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다음에 수출이나 무역도 거의 정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네 가지 지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특히 성장률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정말 성장,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은 5%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홍익표 의원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제가……

보이는 게 뉴 노멀(New Normal) 양극화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고성장이기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늘 다른 경제 평가기관보다 높은 경제성장

을 예측하고 있지요? 금년도 지금 2.6% 경제 전망하는데 대부분의 경제기관이 이것보다 더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높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2.4%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리고 인구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냐 하면 이런 저성장, 저고용 그리고 무역 확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과연 그러면 경제 활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정부는 기존의 낙수이론에 연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께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낙수이론, 예를 들면 몇 개의 선도 부문이 잘되면 그것이 퍼진다 하는 것이 만약에 낙수이론이라면 저희가 그런 식의 경제구조를 생각할 때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이 특정 어느 부문이 잘되면 낙수효과가 나타나므로 거기를 직접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익표 의원 그러면 과거처럼 낙수이론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불균형 성장, 예를 들면 특정 부문의 선도성장을 통해서 전체 경제를 어떻게든 이끌어 간다 이 부분도 이제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과거 우리가 성장연대, 개발연대에 했던 불균형 성장의 문제는, 그와 같은 모델은 저희가 이미 상당히 선진국 문턱까지 온 상황에서는 이미 경제구조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다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R&D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홍익표 의원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정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지금 모든 것을……

○홍익표 의원 제가 황당한 게 정부에게, 저는 주로 산업부 관련해서 IoT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지 내놓으라고 하면 하고 있는 게

없어요.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경제부처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지금 특정 몇 개 산업을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도……

○홍익표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토릭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의원님, 보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지금까지도 만들어 왔고 앞으로 또 꾸준히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가 결국은 저성장은 물론이고 경기 불황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것은 IMF 보고서에도 그렇고 OECD 그다음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든, 세계 경제포럼에서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즉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가서는 안 되고 저소득자, 보다 많은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갔을 때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생기고 불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정부도 보면 계속 대기업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에 대해서 도대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대기업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더 이상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은 해외 무대에 나가서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홍익표 의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작년과 금년 초에 통과…… 작년에 통과시켰던 법안들 보면 원샷법도 그렇고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들 상한 기준을 높인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혜택 본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 기업 활력법은 꼭 중견기업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는 대기업의 기준을 몇 분야에서 낮춘 것은 중견기업에 대한…… 글썄요, 그것을 혜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견기업들도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커 왔고 그것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순간 소위 피터팬증후군같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것은 좀 막아 줘야겠다는 뜻이지 그것이……

○홍익표 의원 알겠습니다. 더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편차가 커서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놓으면 중소기업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50% 이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개선의 대책을 만들어 내기 어려웠고요. 그 결과 한국 중산층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56%까지.

최근 이것은 이후 통계가, 더 신뢰할 만한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계속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고 그래서 매번 대선주자들, 정당들이 중산층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안 나오지요.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저희도 전향적으로 좀 더 개정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월세상한제도……

○홍익표 의원 전향적으로 검토하세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홍익표 의원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전통시장을 좀 늘린다든가 그런 몇 가지를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전월세상한제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월세상한제는 그것이 과연 정말, 특히 전월세가 비교적 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도입했을 때 급격한 효과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이 과연 중산층과 서민 계층을 도와주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의원 지금 뭐냐 하면 이런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의 격차가 하나 있고요, 한 축이. 또 하나는 임금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 그다음에 계층 양극화가 벌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의……

○**홍익표 의원** 아니, 필요하다고 말씀만 하시고 어떤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임금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임금의 차이는 아까 정규직·비정규직 차이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외에 전반적인 임금의 차이도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역시 노동 개혁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홍익표 의원** 그러다 보니까 아태 지역 보면 소득점유비가, 표를 보면 지난 90년부터 상위소득 10%가 옛날에는, 90년에는 29%에 불과했는데 지금 45%로 아태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상위소득의 점유가. 그만큼 상위소득이 빠르게 늘었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조도 매우 커졌어요. 제가 그림 보여 드리겠는데, 생산액 봐도 임금 수준은 아까 얘기했지만 평균 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수출기업은 20%도 안 되고요.

고용의 85%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부가가치 생산이라든지 임금 수준, 수출 기여에 대해서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 턱없이 모자랍니다. 기업 수는 99%, 고용 인력 수로 보면 한 87%쯤 되는, 중소기업이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대기업 의존도가 더 심해졌어요. GDP 기준 보면 처음 2010년에 10대 대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32%가, 무려 43%가 넘었습니다. 대기업만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대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그러나 대기업만 성장한 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보면 수출을 한 경우에도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보다시피 중소기업의 성장세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대기업 비중이 너무 늘어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기업은 어떻게 해서라기보다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잘 클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의원** 지금의 물이, 지금의 게임의 규

칙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장에 맡겨서 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해서 이 불공정한 물을 극복할 수 없고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계층 간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것이지요, 경제 부처가, 특히 기재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것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결코 중소기업은 놔두고 대기업은 놔둬서 더 크게 하는 게 당연하고 이런 식의 안이한 태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오늘 현재도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표 의원** 전경련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경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경련이야 말하자면 민간단체인데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아 마……

○**홍익표 의원**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특별한 사전적인 것이 없이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전경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대기업들도 탈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존재 여부는 전경련이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공공기관이 왜 회비를 내면서 전경련 회원이 되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다 탈퇴를 결정하고 실제로 탈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요.

○**홍익표 의원** 지금 전경련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로비하고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 보셨어요? 전경련 개혁 방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는 못 봤습니다. 마는……

○**홍익표 의원** 전경련 쇄신 해서 향후 조직 개

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정치권과 정부 쪽에 로비하고 있다는데 이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홍익표 의원 전경련 잘 아시다시피 출발부터 이게 정경유착의 산물이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부패 경제인들 석방해 달라고 당시 이병철 씨가 박정희 혁명평의회 의장하고 협의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경유착의 본산이었지요. 최근에는 말도 안 되는, 우리 사회를 둘로 쪼개는 보수단체에다가 그 시위하는 데 자금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역대 이런 적 없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전경련이 과거에 탄생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또 전경련이 개발 연대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한 것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경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탈퇴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회원들이 기업인데 기업들이 탈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리고 공공기관도 탈퇴를 했고요.

○홍익표 의원 이 그림 하나 띄우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경유착, 금권정치, 비리온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차제에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체시켜 주십시오. 정부가 그 결정 해서 설립인가 취소하세요. 그게 담당부처가 산업자원통상부인데 지금 산업부의 등록단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해체하기 이전에 설립인가 취소시키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부가 그것을 그래도 민간단체인데 그렇게 그냥 하기는 어려울 텐데 하여튼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의원 들어가십시오.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1964년에 한 TV토론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치 정부를 회상하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이해하고 싶다’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도 박근혜정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한나 아렌트의 생각을 그대로 차용해 보고 싶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독일 히틀러 나치즘이 왜 생겼느냐? 하나는 유태인에 대한 반인종주의 또 하나는 당시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전체주의의 기원은 뭘까요? 하나는 반공·냉전 이데올로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장 이데올로기입니다. 즉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를 만드는 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개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반공·냉전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장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그로 인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희생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사회는 또 다른 유신독재 또 다른 박근혜정부를 다시 출현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의 공동 대표인 송희경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향해 전력 질

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집중적으로 신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도 기회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뛰어난 인재라는 희망의 열쇠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반드시 선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80년대 먹고살기 힘들었던 위기에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도전으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어 냈던 성공 DNA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로봇이 물류장을 돌며 배송물을 패키징하고 전기와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인공지능과 산업로봇이 스마트공장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서비스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화두를 최초로 제시한 다보스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회장은 작년 우리 국회를 방문해 한국 정부와 대기업의 큰 물고기는 중소기업과 벤처의 작은 물고기와 함께 빠르고 민첩하게 상생·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수직적 칸막이 조직은 정부도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기업이 부처별 혼재돼 있는 정책과 규제 문턱에서 기회를 놓치는 소모전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지금 행동과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어렵습니다. 성장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의 신성장산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된 규제와 정책으로 힘들다는 현장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보면 제조 정책은 산업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은 미래부가, 또 시험운행 허가는 국토부가, 안전운행은 경찰과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드론도 같은데요. 부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여러 규제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희경 의원 부총리님, 정부는 얼마 전에 이를 타파하고자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만들

겠다고 했는데요. 그 설립 배경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4차 산업,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산업들입니다. 이제 막 해야 되는 산업들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산재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송희경 의원 그 추진이 잘 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현재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런데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훈령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2월 중에, 이달 중에는 출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설정하고 이것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내면서 정합성이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송희경 의원 언제 추진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이제 2월 달에 출범을, 이달 안에 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취지와 노력에는 감사드리지만 지적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추진동력이 과연 그 위원회에 실릴 수 있겠느냐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위원회가 위원회 조직이고 하나의 강제력을 가진 그런 단일부처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어차피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다른 부분에도 규제가 이 부처 저 부처 산재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은 어차피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들은 이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통합을 하는 이런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적어도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희경 의원 국민들께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이나 아일랜드는 창업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강력한 지원중인데, 창업 현장에 있는 우리 청년의 고민을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창업동아리 회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창업을 하려면 우선 연대보증,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해 줄 사람도 없거니와 벤처에 와서 일해 보겠다는 청년도 또 자리에 딱 맞는 인력도 찾기가 매우 힘들고요. 또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가 아닌 대출이다 보니까 갚아야 합니다. 또 힘들게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부처를 다녀야 되고 상용화, 영업으로 이윤을 내기까지는, 데스밸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건설한 민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벤처캐피탈은 미래의 가치보다는 당장 수익률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따진다고 합니다. 부총리께서 이런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몇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는 저희도 전향적으로 어떻게, 현재 줄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좀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알려 드리고 하면서, 물론 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많이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그런 대책들이 청년들에게 좀 더 알려지고 제대로 된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전통산업에 종사했던, 이제 곧 구조조정이나 은퇴를 앞둔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도 굉장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산업 노하우를, 현재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만 몰고 가시는데요, 그렇게 묵히지 말고 그 숙련된 기술의 경험을 잘 패키징하면 개발도상국가나 이런 데 진출시키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재교육을 시킨다면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뉠대로의 노하우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재교육 같은 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요.

첫째, 해외로 나가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인 KSP사업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도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더 확보를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도 적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정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하고 또 지자체 3000개 이상의 읍면동까지 교육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송희경 의원** 그런 센터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은 저희가 부처별로 또 이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나뉠대로의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냥 여기 가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의외로 옆에서 하는 것은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앞서 부처 간에 혼재된 정책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의 융합 플랫폼 역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임시허가제라고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송희경 의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특히 정보통신 분

야에서 새로 떠오른 융합서비스 제품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법·제도상의 준비가 안 되어서, 미비해서 시장 진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것을 임시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 줘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송희경 의원**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을 승인을 좀 신속하게 하는 법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송희경 의원**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허가 실적이 작년엔 몇 건이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여기 나오는 것처럼 3건에 불과합니다.

○**송희경 의원** 예, 3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개선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임시조치, 그러니까 1년간 유효하고 1년이 끝난 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는 아주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해 볼 수 있게 만들었고 그 기간이 끝난다고 해도 원래 제약이 되었던 법·제도가 안 바뀌면 다시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서 많이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 기간 안에 문제가 되었던 그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의원** 예,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요, 2010년 타임지가 극찬을 한 우리가 만든 영어교사 로봇 ‘잉키’라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10년간 국고 1000억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한발 앞선 우리의 로봇인데요.

지금 잉키가 몇 개가 남아 있고 어떻게 됐는지 장관님 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잉키는 말씀하신 대로 KIST 진흥로봇사업단에서 주로 산업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서 세계 50대 발명품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스핀 오프(spin off)를 해서 기업도 생겼습니다마는 보급은 그렇게 썩 활발하지 않아서 지금 약 20여 대가 활용 중에 있습니다.

○**송희경 의원**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초등학교에 주로 있고 또 시제품은 과학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희경 의원** 지금 과천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과천과학관입니다.

○**송희경 의원** 잉키는 중소기업에 넘겨졌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고 난 후에 해외진출도 막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없고 또 R&D 지원 이후에 C&P, 즉 커머셜라이제이션(Commercialization)과 프로핏(Profit)을 염두에 두는 이윤창출, 성과창출에 대해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런 과학기술 R&D 추진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실 과학기술은 여러 가지 필러가 있지만, 기초연구가 있고 응용연구, 제품연구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술 사업화를 한 다음에 판로 개척까지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용 로봇이 바로 또 다른 회사에서 개발이 되어서 수십만 대씩 수출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기술개발이 연구개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연계되어서 후속 지원을 정부나 또 투자 회사에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여러 가지 R&D 혁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의원** 후속조치에 대한 제도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송희경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생각의 힘을 키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데요. 질 좋은 공교육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저는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필수교육 이수시간 확대가 꼭 필요해서 했는데요.

장관님, 이 실행 협력 주무 부처는 교육부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송희경 의원** 교육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다행히 교육부에서 2014년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발표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교과과정 개편이라든가 또 일선 교사의 트레이닝이라든가 교재 개발 또는 시설 개보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것도 보조교재도 저희가 만들어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초·중학교에서 선도학교들에 대해서 미래부와 교육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필수교육이 시작됨에 따라서 교사 양성이라든가 교재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가속화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송희경 의원** 선도국은 필수교육 과목이니까 꼭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ICT가 생산해 내는 빅데이터 잘 알고 계십니다.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에 저장이 되는 데요, 이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발전소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가 지금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혹시 장관님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건축법 시행령상에 아마 방송통신시설 중에……

○**송희경 의원** 전기통신시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통신용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희경 의원** 그런데 미래산업의 주요한 사회 기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건축물 용도로 분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방송시설이라든가 공장 등 제각각 허가를 받고 있는데 개선이 절실히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4년도에 민간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났는데요, 손실이 무척 컸습니다. 데이터센터라는 건축규정이 있어서 평소 제대로 된 소방과 보안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인데요. 이게 민간 기업이 아니고 국가기관이었다면 엄청난 자산의 훼손이 일어났을 겁니다. 국토부에서의

개선이 필요한데, 계획과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 활성화의 필요성은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우리 건축법 시행령상으로도 데이터센터의 용도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그 용도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데이터센터는 통신용 시설로 분류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를 별도의 용도로 구별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전산실도 전기·방송통신 시설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보안과 자산 규모가 많이 다르거든요. 꼭 그렇게 시행령으로 고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현재 한 110개 정도의 그런 데이터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신성장산업을 위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구글이나 아마존 등 선도 기업들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 중입니다. 그들이 동북아나 유라시아로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매력적인 나라는 지진이 많은 일본도 또 이미 포화가 된 싱가포르나 홍콩도 아니라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를 허브로 삼아서 센터를 짓고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매출 창출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는 전기요금도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의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희경 의원** 그런데 적극적인 인센티브나 투자 유인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조세감면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산업에 주던 외국인 투자 세제혜택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같은 것을 포함한 ICT 또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주려고 그러고요. 또 관련된 인프라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지의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일대일로 타기팅해 가지고 유치하는 활동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부처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정책 실현과 부처별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것은 제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많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이 문제는 아까 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희경 의원** 중국이 전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동력을 집중 육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산이나 조직, 소관 법령 등에서 각 부처를 조율하고 리드하는 가칭 'ICT 부총리' 혹은 '신성장혁신 부총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저희가 동감을 하고 그래서 아까 전략위원회도 저희가 곧 출범을 시킵니다마는 부총리 제도가 이런 전략위원회하고 기능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또 여러 가지 조직의 개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의원** 검토하고 개선할 시간이 그렇게 저희에게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컨트롤타워는 전 국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편적 인식 제고, 교육개혁, 문화혁신 교육, 정부정책 지원의 전폭적인 하모니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회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의 노력 외에도 국민의 신뢰 그리고 국회의 실천이 지금 더욱 필요하고 과감한 정책 지원으로 위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국회 내에 예산과 규제 완화 그리고 발전법 등을 책임지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화면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규제프리존 법안이라든가 무려 40여 건 이상의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2월 국회에 이런 민생법안 통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국민의 미래 먹거리로써 여야의 대승적 합치가 우선되어야 큰 허들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여름이 뜨거우면 가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어떤 새벽, 어떤 가을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우리의 몫입니다.

응변창신(應辯創新)이라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서 변화에 응하고 또 주도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 '어떤'의 실천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곡점 시기에 당쟁을 넘어 미래 성장을 위해서, 또 청년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하도록 역사와 국민 앞에 합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송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연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이연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중 간 대립, 나라 안팎으로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10% 육박에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 사상 최악입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일자리는 없고 빚만 늘는데 물가마저 치솟고,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

는 거냐며 울부짖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 최근에 장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바쁘셔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직접 저희 집 일 때문에 간 적은 없습니다만 어제 전통 시장을 가서 좀 봤습니다.

○이언주 의원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어려우시고요. 청탁금지법의 영향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생활물가라는 것도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언주 의원 마이크를 좀 바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언주 의원 당근이 이만한 게 2500원 하더라고요. 엄청난 것이지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당근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출하량이 줄어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근은 제주도가 가장, 70~80% 하는데, 거기서 지금 생산이 아주 저하가 되어 있어서, 1월 달은 출하량이 무려 5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엔 비해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신선식품이, 생필품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조사를 보면, 계란 60% 넘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125%, 무 100% 넘고, 배추도 만만치 않습니다. 휘발유도 역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흉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배추나 무, 신선식품은 사실 날씨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겨울에 태풍 문제가 아주 직접 영향을 줬기 때문에, 태풍을 저희가 아주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언주 의원 아니, 태풍을 예측하는 게 아니

라 흉작이 들면 수입을 한다든가 해서 물가가, 특히 구정을 지나고 하면서 물가가 치솟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입을 급하게라도 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뭘 했느냐라고 저는 묻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사실 저희가 수입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계란의 경우는 수입을 좀 긴급히 해서 지금 계란 가격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하고 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산 선호가 강합니다. 무가 특히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상황을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 같은 경우는 수입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할인을 권장을 하긴 하는데, 국민들께서 배추나 무의 문제 같은 것은 그동안 가격 인상으로 고통을 겪으신 데 대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조금은 안정한, 약보합세로 전환은 되고는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경제라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흉작에 따른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정부가 농장 대응을 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농장 대응까지 하고 그러니까 유통 상인들이 슬금슬금 그동안 올리고 싶었던 것을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올린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해서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유통 부분에서의 말하자면 편승 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강력하게, 저는 물가에 대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품목별로 틀린데요, 계란은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속 해서 수입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AI의 효과에 의한 것이 한 6개월 간다고 보는데 그

안에 도로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약 포함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 대응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하여튼 낮춰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외에 가공식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라면, 맥주, 이것은 사실은 그 업체들의 사정이 반영이 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것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계란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편승 인상의 대표적인 게, 중국집에서 계란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갑자기 계란값이 올랐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배를 내라 이렇게…… 사실 계란액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음에도 했다가, 그래서 지금 수입이 되어서 계란값이 안정이 된다 하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잡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편승 인상 같은 이런 문제, 특히 행정으로 막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강력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 다른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세 가지 조건 하는 게 교역축진법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세 가지 지정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중에 둘은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도 지정이 안 됐고, 그래서 올해도 지정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라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정이 되면, 그야말로 지정하면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과거의 수단을 들고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종합무역법상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설명을 하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일단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미 경

상수지 흑자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하고 또 동시에 직접적인 경상수지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대미 투자를 좀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선제적인 노력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미 실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산업부 같은 경우는 카운터파트하고도 이미 접촉이 됐고, 저도 이제 새로 인준을 받는 즉시 직접 장관 레벨에서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소위 리치 아웃(reach out)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것도 그중의 한 문제일 텐데, 물론 환율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도 하고 하면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의원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중국이 지금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언주 의원 중국도 보면 충족 여건이 1개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하나……

○이언주 의원 충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1월 말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2개밖에 충족이 안 돼서 팬찰을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안이하게 볼 게 아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 한 얘기는 거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그렇게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우리가 2개 가지고 팬찰다, 이것은 조금 안이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이언주 의원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중국이 오히려, 물론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비교가 안 되게 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산술적으로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입니다, 다른 독일, 일본, 우리나라, 그다음에 대만 이런 나라는 다 2개 썩인데. 그런 문제로 보면 중국이 된다면 우리는 무사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팬찰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대비해서 노력

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언주 의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미국의 어떤 대응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있지요. 그리고 특히 의원님 지적이 더 중요한 것이 중국이 되고 우리가 안 됐다, 그랬을 때도 참 큰 문제입니다.

○이언주 의원 또 연쇄 효과가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중국이 우리의 제1교역국이고, 미국은 제2교역국인데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커진다면 그것에 의한 간접적인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참 여러 가지를 지금 예의 주시해야 된다,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언주 의원 최근에 화장품이라든가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른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화장품 문제도 자기네 위생 기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문제는 서류 미비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것이 당신네가 사드를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하는 것은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비관세장벽, 예를 들면 클래식 공연을 취소한다든가 한류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이 혹시 연관이 되지 않고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분명히 이것은 사드와 연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드 때문에 한다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로서는 일단 중국의 국내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중국이 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서로 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실지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 쪽과 많은 대화가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지만 복잡한 국제관계 또 전략의 문제가 있고 또 한미 동맹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수단으로 항의

를 할 일이지 그것을 우리나라하고의 사이에 어떤 민간무역에다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례에 어긋난다든가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 다르다든가 이것도 저는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저 자세로 나가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그 문제고 이것은 이런 문제다, 그래서 민간무역에 대해서 중국이 오버해서 우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TO 제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외교는 아시다시피 한 번 그냥 넘어가면 이것이 관례가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서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분명히 이것은 국제무역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당당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WTO 제소도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로서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것도 여러 가지 설득의 노력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른바 통상외교와 경제외교의 측면에서도 당당한 자세는 유지를 하되 또 협조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부총리님, 전안법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말씀……

○이언주 의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이언주 의원 산자부 소관이기는 한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하는 데 같이 함께 경제부총리로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아마 의원님이 증명서류 보관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영세상공인 부담 부분 지적하시는 것

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부하고 같이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현장을 무시한 것이고 또 국회도 그냥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을 합니다. 어쨌든 반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도 해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안법 말씀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언주 의원 장관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품 안전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또 수입자 또 판매자의 부담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살리면서도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과도하게 이행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 소비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포함해 가지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언주 의원 예를 들어서 요새는 옷 같은 경우에도 한 디자인으로 옷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언주 의원 백화점이나 상가 가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맞춤형·다품종 생산……

○이언주 의원 한두 개 이렇게 걸어 놓고 또 재고 찾다가 다른 대리점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그거 하나에 단추, 지퍼 이런 것까지 다 인증받아야…… 그리고 그것이 비용이 꽤 들어요. 그것이 그냥 공짜로 또 국가가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행도 계속 바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언주 의원 현장성이 없습니다.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것을 그러면 위험과 좀 비례해서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안전이 중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언주 의원 제가 보니까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가죽이라든가 의류나 잠화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 인증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원칙을 2개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험성의 정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의류 잠화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 우리가 항상 친환경 야채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언주 의원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합성 섬유 옷을 못 입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이언주 의원 그래서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자율규제와 강제규제를 좀 나누시고, 그다음에 위험 같은 경우에도 그 유발의 책임 정도, 그러니까 제조를 했느냐 아니면 유통이나 수입을 하느냐,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중대한 어떤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판매·유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부담을 지워야 된다, 그래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규제를 즉각적으로 하고 그래도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가슴기살균제 KC 인증 안 받아서 문제된 것 아니잖아요. 저도 피해구제법 발의하고 이번에 통과됐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막 문제 있다고 했는데도 대응을 안 해서 더 커진 거예요. 그것이 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또 문제가 됐을 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제품이 주는 위해 정도, 그리고 제조자나 아니면 판매자나, 판매자인 경우에도 단순히 구매 대행을 한 사람이나 아

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품 안전 체계를 특히 이행 가능성, 소비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치고 또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품 안전의 중요성이라는 가치도 저희가 손상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렇지요. 저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고 판매되는 모든 물건을 다 책임지고 안전 관리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아주 안전도가 중요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 안전 확인, 또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내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섬유라든가 또 가방이라든가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조금 규제를 달리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하여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제품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과도하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요, 꽃집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워링크가 나오는데요.

화면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광고비에 따라서 검색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것이 공공재 아닙니까, 포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이 광고비 받고 줄을 세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광고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하고 광고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데요. 광고라는 것을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검색으로 같이 저게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런데 공공재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가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선점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문제 있다 없다 이렇게……

**○이언주 의원** 아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제 체계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것이 광고라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를 하고 광고를 하면 괜찮은데 일반 검색을 했을 때 꽃집 검색을 했을 때 꽃집에 대한 광고라는 표시를 안 하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이언주 의원** 배달앱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이언주 의원** 수수료가 한 10% 정도 되던데요. 지금 영업이익의 한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제가 구체적으로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영업이익 평균이 한 8%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광고, 지금 배달앱 수수료가 10%가 넘을 수도 있다…… 이게 됩니까? 대단한 혁신입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수수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정 수준에서 제한해야 되지 않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래서 수수료 자체를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것도 일종의 가격인데요,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언주 의원** 아니요,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수료 제한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런데 금융……

**○이언주 의원** 부총리나 이런 분들하고 연구를 해서……

이것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만 금융하고 차이는 금융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이언주 의원** 근거를 만들어야지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셔야지요, 만약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사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자본주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비즈니스에서 가격을 통제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언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통제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이대로 놔두면 전부 다 말라죽습니다.

이제는요, 이게 뭐가 대단한 혁신이예요? 이 공간, 그것 공공재잖아요. 기간망, 국가가 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말뚝 박아 놓고 ‘여기 내 땅이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광고하려면 돈 내라’, 그리고 10% 20%씩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그런데 이게 사실상 독과점 아닙니까? 이게 뭐니까, 이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래서 독과점이 맞다 하더라도요 일단 그런 한계는 있기 때문에……

○**이언주 의원** 이런 구조면요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회보고 법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이 그렇다는 것인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 배달앱, 택시, 대리운전,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다가 몇 년 지나면요 정말 나중에는 제대로 먹고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개입해서 물을 만들고 필요하면 규제를 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왔지 않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관련 부처하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이 문제는 저는 계속 문제를 삼을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다른 부처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규제 체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알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온라인상의 선점 효과가 기술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파먹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외형적 성장에 현혹돼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중에는 전부 다 먹고살 길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문제는 저는 꼭 문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연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연혜 의원입니다.

트럼프발 신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 질서가 요동치며 우리나라 경제도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반열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변방 국가로 쓰러져 가느냐를 판가름 내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6,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자칭 유력 대통령후보라는 분들이 쏟아 내는 공약들을 보면 제대로 된 인식과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도덕성만 갖추면 경제는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는 좀 안이한 인식에다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합니다. 그마저도 거대 담론에 치우쳐서 막상 민초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

다.

본 의원은 정치의 알파도, 오메가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에 있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오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민생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실제 일자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연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 인구만 1200만 명에 달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잘되면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 모두가 안정된 중산층이 될 수 있고 나라 경제도 튼튼해진다고 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다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4차 산업혁명이 큰 제조업 이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4차 산업혁명에 대변되는 역할을 그중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연혜 의원**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강하고 또 ICT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시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이런 스마트공장 등을 도입하고 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을 결합시키는 기술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실은 중소기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2016년 말에 2800개 사가 누적되어 있는데 올해 17년에는 기존 목표가 4000개 사였습니다만 5000개 사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러한 도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공장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을 올해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시 핵심 융합기술 개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역시 자금과 금융·세제 지원이 되겠고요. 컨설팅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제 지원만 말씀을 드리면 특허권 같은 기술 취득 시에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여러 가지 금융 지원도 같이 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의원**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지원 정책이 재정 투입 중심의 지나치게 양적 지원 정책에 치우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질적인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기술평가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결국 기술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기술평가에 의한 기술금융 지원 제도 이것을 이제 개편을 해야겠다, 그래서 개편 관련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공 조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가격 이런 것만 단순지표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기술평가등급으로 전환하도록 그것 역시 상반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선 방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의원** 정부정책에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이런 게 현장에서 아주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또 중복 등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가지고 현장 위주의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의원** 그리고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반



드시 일자리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생산성과 경직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스마트공장의 도입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일부에서는 칼퇴근법,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해법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그 취지는 우리나라에 야근이 너무 만연해 있고 근로시간이 지금 세계 최장이라고 하니 그것을 단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이고 그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야근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업무상, 회사의 사정상 굉장히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또 그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되도록 줄여야 되겠지만 그냥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근이 불가피할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단계적이고 조화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길게 봐서 우리나라가 최장시간쯤 되니까 줄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또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연혜 의원 저도 칼퇴근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또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논의에서 노동의 경직성 문제 또 우리나라의 생산성 문제 등을 도외시키고는 이런 정책들이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최연혜 의원 선례로 IMF 이후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제 근무 형태를 늘린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비정규직 문제의 단초가 되었고 또 당시에 벤처창업 지원 정책으로 많은 성공적 기업들이 나왔지만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확산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 않습니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최연혜 의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무조건 일자리 창출, 공정한 경제구조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동하기 위해서 정부의 준비사항, 특히 노동 개혁 방안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 말하자면 굉장히 기술에 근거한 혁명이고 이렇게 되면 흔히 우리가 과거에 쓰던 말대로 성역화라는 것에, 그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고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 개혁, 우리가 노동 4법도 중요한 것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나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인 단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고, 파견법에 관련되는 것입니까 마는 뿌리산업 파견 허용 같은 것,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요.

또 채용에 있어서는 역시 능력 중심 채용 확산해야겠다, 그리고 역시 이런 것이 임금체계가 성과에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아주 중요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물론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더 강화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연혜 의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더 잘 알리는 그런 노력을 많이 병행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연혜 의원 영세 소상공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 670여만 명 자영업자, 560여만 명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 닫는 자영업자만 하루에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

다. 부총리께서는 이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생계형 업종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많고요. 음식점, 뭐 대표적입니다마는 그 외에 도소매업 같은 것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역시 많으니까, 많다 보니까 과당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것은 곧 낮은 수익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싶고, 또 최근에 일부 업종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영향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연혜 의원** 청탁금지법 시행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농수축산업이나 화훼업,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하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 장관들이 현장에 나가 봅니다. 그러나 그냥 보는 것이고, 관찰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청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분석 중입니다.

일차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과연 직접적인 피해가 아주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법을 개선하기에는, 법을 고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근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완 방안, 조정 방안을 관계 부처하고 해서 권익위라든가 저희가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법을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또 시행한 지 불과 얼마도 안 돼서 이렇게 성급히 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드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부총리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 방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 속에는 시행령의 개정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행령의 조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그 피해 입은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몇 가지 작은 것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연혜 의원** 민생은 저는 타이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정책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완료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게 이 자리에서 제가 언제까지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 놓고 법 개정만큼 시간이 걸리는 조치를 정부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빨리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의원** 예, 신음하는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빨리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작은 것부터 근본적인 것까지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의원** AI 문제, 구제역 문제인데요.

사상 최악의 AI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축산농가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 또 계란값 폭등이라는 서민들의 식탁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피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피해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봤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발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정부가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국민들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드리기 때문에, 해당 농가도 그렇고 소비하시는 전 국민들이 그렇고 정부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후대책이라도 저희가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의원** 한두 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이런 참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인재다, 또 정부가 안일한 대응을 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저는 탁상행정도

한몫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요 구제역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의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지도부터 종합적인 근본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 구제역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켜 드린 대로 농가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물론 그렇게 한 농가의 책임도 있지만 교육을 일단 해 놔으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같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정말이 구제역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피해가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의원 조류의 감기이기 때문에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역하는 것하고 또 확산을 막고, 하여튼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0대 국회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초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바빠 과거의 낡은 제도와 의식을 혁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대혁신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에 의해서만, 그리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권의 협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정치 대연정

논쟁에 앞서 국민 생존과 직결된 경제 분야에서 경제 대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3일 우리 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제안한 초당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초당적 경제 대연정을 통해 규제혁신, 노동 개혁, 재벌 개혁 등 산적한 경제 개혁 과제를 완수해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합니다. 국회가 협치해서 당장 2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 등을 통과시킵시다.

부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일분일초의 공백이나 단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최연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대통령, 대화합, 100%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걸었던 우리의 희망은 4년이 지난 이 순간 절망으로 변하고,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우리의 자부심은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대로 추락하여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직장다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의 숫자는 날로 늘어 월 150만 원 정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는 결혼 포기, 출산 포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자식들 뒷바라지 때문에 부모 세대의 삶이 질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나오시지요.

오후 내내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감사합니다.

○최운열 의원 피곤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닙니다.

○최운열 의원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탄핵 정국의 주요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물론 앞으로 수사 결과라든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보면 부당하게 대기업에게 사업을 하도록, 출연을 하도록 한 것으로 지금 그것이 제기된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뿌리는 정경유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독버섯과 같은 정경유착이 왜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게 물론 과거의 산물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의 관행이 아직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 남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작년 말 국회 답변 때 이런 것이 이제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고,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약점이 정권이나 정치권에 발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기업 회장을 불러 약점을 들이대고 '정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돈 좀 내시오' 하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재벌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 중에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정치권으로부터 기업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몇 가지 다중대표소송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는 그 취지와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기업의 지배권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방어 기제가 또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의원 요즘 대기업들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썽,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또 그것의 주요 결정은 결국 주주총회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사회 같은 것이 과거보다는 많이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소망했던 바와 같은 수준에 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불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본 의원이 오래전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어 헤지펀드 같은 회사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1명이라도 있었다라면 이번의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를 그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대주주의 전횡을 적절히 감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1명이라도 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법 개정안을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을 살리는 법이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은 정부와 결탁하여 여러 특혜 속에 경제를 주도했고 반대급부로 권력에 준조세를 납부하는 먹이사슬로 얽혀 있습니다. 이 유착을 끝내고 이제 대기업도 법의 지배를 받게 하여 정경유착, 편법승계, 불공정거래 관행, 기술탈취의 악습에서 탈피만 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도 쉽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임금 구조조정과 기득권층의 양보를 전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때 질문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최운열 의원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병상에 누워 있는 삼성그룹의 이견희 회장이 2000억 원의 현금배당을 받게 됐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최운열 의원 그러면 여기서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현금배당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반대급부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의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최운열 의원 본 의원은 만약 이견희 회장께서 그 2000억을 회사에 반납하면 연봉 4000만 원짜리 정규직 일자리 5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부총리께서 직접 삼성에 이런 건의 해 보실 용의 없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 분위기도 있고, 제가 말하자면 삼성이라는 사기업에 그 배당과 임금 체계를 직접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배당을 좀 줄이고, 줄인다기보다는 배당의 비중을 좀 낮추고 그것을 임금으로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그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정부가 해결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의원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법은 지키되 우리 사회가 지금 청년들이 제일 어려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견희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2000억 현금배당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그분 삶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쭙 본 거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기득권층의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 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운열 의원 납품가 부당인하, 일감 몰아주기 관행만 개선되어도 중소기업 적정 이윤의 보장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수준이 올라갈 것

이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호도가 높아질 겁니다.

대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도 뒤에 숨어 면죄부를 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고발이 이른바 남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기업경영 부담의 증가로 갈 것이고, 또 이게 위법성 판단에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견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다만 이 문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제 현실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고발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현재 저희가 요청의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하시겠지만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법이 있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켜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최운열 의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최운열 의원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작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 기존의 일자리 700만 개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 정도 생긴다고, 이런 보고서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작년.

○최운열 의원 우리 정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이것이 아직까지도 미래의 물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과연 집중할 수 있는 산업 부문인가 해서 그런 것도 좀 작년에 이미 이렇게 지정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지원이 있는데 이게 또 지원과 더불어 불가피한 규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연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아, 최 의원님 아니고, 죄송합니다. 송 의원님이 지적하셨군요.

하여튼 규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그래서 지원이 지원답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 그 당시 다보스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건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들었습니다.

○**최운열 의원** 기존 규제 체계로부터 특혜를 받고 자란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을 허용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경쟁 생태계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IT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최운열 의원** 이를 금융산업, 인공지능, 의료산업,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여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부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흔히 혁신에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많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세계적인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로 비즈니스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의원**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에서는 혁신기업이 스타트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래요. 그게 방금 부총리 지적하신 대로 이런 규제 때문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다고 봅니다.

○**최운열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규제 체계를 보면 무엇이 도래할지 알 수 없는 미래 상황인데 열거주의 방식의 규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 규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환경, 인권, 안전, 공정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자에 한해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하고 창업기업에 우수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를 정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차등의결권 제도가 이것도 역시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양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영권 방어라는 문제가 또 결국은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지배주주 견제 이런 문제, 이게 서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데 반면에 앞으로 그것이 좀 커지면 또 주주의 감시 문제는 좀 약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여튼 잘 살펴보고요. 이것을 신중하게 잘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기존의 기업한테까지 확대하면 절대 안 되고요. 창업자한테 일정 규모로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게 창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는 규제 완화냐 강화냐를 따지는 규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관점부터 혁신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지배구조 개선, 공정경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진다면 우리 정치권도 고도 성장기에 가졌던 규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규제 개혁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4차 혁명에 대비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다 많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

고 싶습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의 정치·경제 상황 때문에 실의에 빠져 있을 우리의 미래 주역들인 젊은이들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의 청년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가 살기 어렵습니까? 오랜 기간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사회의 선배로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졸업 후 3, 4년씩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좌절하고 방황만 하기에 여러분의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회현상에 대해 너무 방관하고 무관심했던 여러분 선배들의 전철을 결코 밟지 마십시오. 무관심과 냉소가 결코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의 계절을 맞아 대당평·대화합 같은 추상적이고 현란한 구호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심으로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지도자,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지도자를 선발하는 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한 사람도 기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정치혁명을 주도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재철** 최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오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오세정 의원입니다.

국가가 내우외환에 빠졌습니다. 밖으로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 문제로 중국·일본과의 관계가 매

우 불편하고 자유무역의 본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자유무역 정신을 거부하면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민생이 어렵습니다. 수출절벽, 내수절벽에 막혀 경제는 바닥이고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에 고통받는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되고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밀려오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우외환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국력을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힘,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국가 연구개발 현황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감사합니다.

**○오세정 의원** 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창조경제인 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오세정 의원** 정부 초기에 창조경제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정부 각료들까지 우왕좌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부총리께서는 창조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정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창의적인 과학기술로 첨단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결과로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세정 의원** 저 또한 이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창조적인 첨단 벤처기업의 육성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 정책이 얼마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그래도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4년이 지나서 이제 성과가 그래도 점차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벤처기업 수가 3만 개, 이것은 가장 아마, 지금 제일 많은 숫자이고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봐서. 그것도 신규 투자액도 2조 원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창업기업을, 그야말로 벤처기업들을 많이 보육·지원해서 그 결과가 많이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창업기업 육성이 한 1657개라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높이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성과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가 19개의 창조경제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대기업에다가 하나씩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심하게 말하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한 7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 또는 무상 지원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백한 관치이고 또 특검 수사에 의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식을 이용해서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이 독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썄, 수사에 관계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물론 각 사가 하나씩 지역별로 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 그것이 가장, 그것을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사가 하나씩 맡았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들은 또 그것을 상당히 만족하는, 특정한 기업이지만 그래도 큰 기업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측면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큰 회사가 하나씩 맡는 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지금 정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정 의원** 글썄, 그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효율을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꼭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벤처나 중소기업의 창업 육성, 과거 정부에서도 당연히 추진하던 일이었고 이를 담당하는 기존의 정부 부처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들 기존의 창업 관련 기관과 창조경제센터가 특별히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좀 다릅니다. 사실은 사업 대상이라든가 목적, 기능, 이런 것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창업보육센터는 의원님 잘 아시지만 창업 기업 대상으로 해서 입주공간을 제공한다든가 경영기술을 지원하는데 이 혁신센터는 이런 창업 지원도 하지만 또 중소기업 혁신 이런 것도 같이 해 주고요. 판로나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이나 해외 진출 지원 이런 것도 좀 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같은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테크노파크는 또 반면에 창업 기업이라기보다는 지역 내 산단과 연계한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센터가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정 의원** 그런데 실제로……

자료화면을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셨는데 창조경제센터에 들어간 여러 기업 중에서 사실은 특화 기능하고 관계없이 그냥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면 되는 그런 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기존의 사



업을 좀 더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행정적인 낭비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실적을 보면 중기청의 창업보육센터가 창조경제센터보다 훨씬 월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창조경제센터는 지난해 549억 원의 예산에 매출이, 거기서 나온 기업들의 매출이 2500억 나온 정도, 고용인원 한 2300명 정도에 그쳤는데 창업보육센터의 예산은 혁신센터의 40%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이 1조 7330억, 고용인원은 1만 8000명으로 혁신센터보다 7배, 8배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면 창조경제센터가 획기적으로 뭐가 변한 것보다는 그냥 단순 확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의견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아까 과연 꼭 이게 혁신센터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업들 예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합적 기능을 하다 보면 여기 올 수도 있고 저기도 올 수 있는 게 있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나중에 두 번째로 주신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제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정 의원** 아마도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보육센터는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기업들이 있고 창업혁신센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이 좀 덜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과연 가장 좋은 정책이었나, 경제부총리로서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 총괄하시는 분이 볼 때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효율적이나 하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다음 정부에서는 이 첨단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취지는 당연히 살려야 되지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의원** 아까 백서 말씀하셨는데 백서나

하여튼 이 정부의 경제성과나 이런 것을 리뷰를 하실 때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면 다음 정부에서 도움이 될 것같이 느껴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평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무슨 백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로서는 또 그동안 쪽 각 개별 정책별로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작년에 한 것에 대한 평가도 또 해 놓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축적한 것을 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것도 하면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또 다음 정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정 의원** 예,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미래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계신데 좀 무료하실 것 같아서……

연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동의하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효율성이라는 것이 아웃풋의 질적 가치가 국제적 수준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동감합니다.

**○오세정 의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국가연구개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입을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아주 일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연구개발자들 자신도 어떻게 연구개발을 하는가, 어떻게 국제적인 수월성을 담보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이 점은 사람들이 잘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도 옛날에 과학자였던 사람으로서 이 점은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초기에 정착을 시키려다가 보니까 아마 양적 팽창을 집중적으로 추구를 해서 양적 팽창을 달성은 했지만 질적인 수준은 못한 그런 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연구개발을 각 부처에서 관장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좀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도 당연히 있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이제는 세컨드 페이지

(second phase)로 아주 크게 시프트(shift)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저희도 강력하게 느끼고 있고 모든 연구자도 동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의원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정부의 간섭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있어 가지고 많은 규제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사실 연구기관의 연구라는 것은 연구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어떤 카테고리 분류되어서 어떤 제약을 받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데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의원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지요.

기타공공기관에 속한 기관들 리스트를 보시면 이게 연구기관 말고 강원랜드 같은 것, 기업은행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카지노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물론 강원랜드나 지금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또 사실 인문사회 쪽 연구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기관들이지요. 그런데 이게 기타공공기관의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정 의원 문제는 같은 규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래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획재정부는 이것을…… 이게 과학자들의 거의 10년 넘은 염원인데 그 관할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문사회 쪽 연구기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공운법상의 준정부기관, 이것보다 좀 더 규제를 많이 받는 지정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의 어떤 특성 때문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출연연도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

서 최소한의, 지금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중에 규제를 제일 적게 받는 것이고 경영공시라든가 고객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의무는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이것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의원 그런데 그것은 국내 기관 간의 형평성 이렇게 따지시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을 보면 다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여기 자료에 나오지만 막스플랑크연구소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도 정부 돈이 들어가지만 하나도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간섭은 안 한다,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니까 간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세계적인 경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의 사례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오세정 의원 어떤 것이 다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오세정 의원 어떤 것이 다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막스플랑크 같은 데는 굉장히 플렉서블(flexible)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뿐더러 그 스스로가 조직의 축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오세정 의원 막스플랑크가 조직을 축소한 적은 없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오세정 의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하르나크 프린서플(Harnack's principle)이라고 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원칙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른 간섭을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경영공시 정도면 이것은……

○오세정 의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임금피크제도 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오세정 의원 그런 간섭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데 사실 임금피크제는 이런 기관들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저 해외 기관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세정 의원 아니, 임금피크제하고 국가연구기관 이것은 얘기가 좀 다른 게 정년을 늘려 주지 않으면서 임금피크제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게 과학자들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켰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정년 문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오세정 의원 한번 살펴보시지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오세정 의원 감사합니다.

미래부장관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 3월에 알파고 파동 이후에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꽤 많아졌고 미래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종합전략을 KICT라고 해서 2014년 말부터 전략을 죽 세웠었는데, 그래서 9대 전략을 세웠는데 2015년 중반 즈음에 종합평가를 해 보니까 스마트사회로, 그러니까 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회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공지능에 대비한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또는 사회 변화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죽 해 오다가 2016년 연초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저희가 연구개발 그다음에 인재양성 그다음에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죽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인공지능이 반드시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입하면 산업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서 아까 일자리 얘기도 나왔지만

종합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이 도래해서 바뀌는 그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미래부 내에 설립을, 만들었습니다. 임시조직이지만 한 30명 정도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의 6개 이상 부처에서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한 반년 정도 작업을 한 끝에 지능정보사회 추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작년 연말에 발표했고, 거기에는 무슨무슨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종합적인 어젠다와 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분야랑 융합했을 때 어떻게 산업이 바뀌는가 하는 부분이 또 커다랗게 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회적 변화, 국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변화를 어떻게 하자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큰 틀에서의 대책을 만들었고 올해에 하나하나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실행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정 의원 저도 그 계획을 봤는데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보다는 이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중의 하나,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설립이 있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것은 저희가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에는 연구원 얘기는 없고 연구원은 연초에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있었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다시 그것을 세부화시킨 계획에서, 기술확보 계획에서 나왔었습니다.

○오세정 의원 저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하고 전체 종합계획에서 보면 아직도 정부가 이끌고 가고 민간보고 따라오라 하는 그런 멘탈리티(mentality)가 있는 것같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북돋아 주고 정부가 뒤에서 도와준다는 입장보다는 앞으로 끌고 간다 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화면 보면, 미국의 경우는 보시면 전혀 그런 것 없이 국가가 할 일이 뭐냐…… 이게 작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인데 국가가 하는 것은 그냥 'R&D 투자를 조정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좀 벤치마

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오세정 의원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과거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R&D 시스템과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관료가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큰 방향을 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정부 관료가 목표를 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은 철 지난 산업화 시대의 유물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차기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오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과 현대차그룹, 이 두 재벌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은 뇌물을 주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을 성사시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고, 이번에는 자사주를 이용한 인적분할 방식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이용해서 인적분할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분할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2.8%, 약 36조 원 상당의 자사주에 신설회

사의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십조의 주식의 결권을 확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이 삼성 말고도 롯데, 현대중공업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과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기업이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 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그 재벌의 승계과정 역시 정의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이용한 재벌들의 편법적인 승계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1년 유예기간을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재벌들이 자사주를 이용한 인적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와 재벌 사이에 누가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느냐의 속도전의 문제에서 국회의 패배를 야기합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자는 것이고 이 법안을 껌데기만 남기겠다는 사실상의 꼼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까지 동원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막지는 못했지만 자사주를 이용한 부당한 승계 작업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나라의 경제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박용진 의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사주를 이용한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대주주가 자기 돈 안 들이고도 지배력을 강화한 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럴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지요? 사실상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소액주주의 의견권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그렇게 자사주를 이용한 인적분할을 함으로써 대주주가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주회사 도입 취지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다른 어떤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제도랑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 어쨌든 우리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 것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들으신 것처럼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 국회가 손 놓고 있게 되면 사회적 불공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사회정의의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더라도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 잠깐 다녀온 뒤 무려 270조 원대의 가치를 지닌 삼성전자를 그야말로 날로 먹게 됩니다. 그가 삼성전자를 날로 먹는 만큼 우리 사회의 정의는 날로 지체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발 늦어지면 재벌이 한걸음 앞서갑니다. 이번 2월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부산, 산타페의 사고 장면입니다. 작년 8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운전자는 부인과 딸, 만 세 살과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손자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을 모두 그 자리에서 잃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운전 경력만 17년 이상이었던 베테랑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수와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졸지에 가해자로 내몰리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고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는 공익제보를 받았습니

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국토교통부는 2008년 산타페 디젤 차량 등 고압펌프 연료 비침 현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2008년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파악 못 했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아니, 건건이 어떤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알려 드려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진 의원 무상 조치 취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용진 의원 무상 조치, 무상수리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수리 조치라는 게 자동차 제작 결함은 은폐·축소했을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하더라도 그게 형사 고발되는 것이고, 또 리콜 조치가 되면 무상수리에도 불구하고 당해 차량들을 전부 다 해당 수리, 부품 교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비용 축소를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러면 한번 둘이 같이 따져 볼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박용진 의원 제가 지금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의원님께서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박용진 의원 제가 받은 공익제보의 핵심 내용은 사고 차종에 대해 애초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국토부가 무상수리 조치로 대응함으로써 리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현대·기아차가 이 차량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은폐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드 계속 보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차 품질사업부가 2004년 9월에 작성한 구형 산타페 디젤 고압연료펌프 품질 문제 보고 자료입니다.

이 현대차는 산타페 등 모델명 SM, JM, FO로 불리는 차량에 디젤 고압연료펌프 연료 누유가 일어나는 결함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방금 말씀드린 디젤 고압펌프 연료 누유 결함이 엔진 오버런도 일으키고 급발진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제보는 현대·기아차가 축소·은폐한 결함이 무려 32건이고요 대상 차량만 단순 합산 총 523만 대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두 안전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결함들이 한결같이 은폐되거나 축소 리콜되었습니다.

장관님, 파악도 안 하고 오셨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박용진 의원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서도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저희가 이 관련된 자료 다 국토부에, 공익제보 저희가 받아서 다 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금 저희들 공익제보 받은 32건에 대해서는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했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금년 3월 중이나 해서 조만간 그 결과를 심사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지금까지 뭐 하셨는지를 묻고 따지는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금까지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32건의 공익제보가 있었고요 그 공익제보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은 접수되는 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용진 의원 아까 장관님께서 비용 절감 효과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거기 무상 교환해 줘 가지고 비용을 축소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박용진 의원 그런 얘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누구한테 듣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대답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척 보면 아십니까?

그러면 같이 해 볼까요?

현대·기아차가 왜 결함을 축소·은폐했는지, 리콜을 해야 되는데 왜 무상수리로 대충 때웠는지…… 다 돈 때문입니다.

무상수리와 리콜의 차이가 뭐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무상수리는 그 해당되는 당사자만 카무플라주(camouflage)가 되어 가지고 비용이 커버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리콜이 된다면 동일한 사양의 차량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정확하게 말하면 리콜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알려야 되고요. 과거에 수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상수리는 차주가 부품 교환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 주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박용진 의원 국토교통부, 혹시 현대·기아차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할 리도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현대차 안전 문제 코스트 절감 내용 내부 자료입니다. 무려 1933억 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청조사를 종결시켜서 비용을 절감시킨 것이 800억 원에 이릅니다. 무상수리, 국내의 관청조사 종결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현대자동차 스스로가 작성한 상세한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장관님,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가 현대차에 막대한 이익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회사 차원에서는 자기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국토교통부는 그것을 공익에 입각해서 자동차 제작 결함이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중대한 결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박용진 의원 즉각즉각 조치 다 취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좋아요. 그러면 2월 7일 날 저희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국토부가 저희한테 준 거예요. 124페이지에 보면 이미 2012년에 전 제작사에, 전 차종에 대해서 자동차 급발진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5년 지났습니다.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가요? 그때그때 조치하

셨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자동차 급발진, 제작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조사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용진 의원** 어떤 노력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가 좀, 그 자료를 저도……

○**박용진 의원** 5년 동안이면요 정권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5년 동안이면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 자동차 할부로 구매해 가지고 할부기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그렇게 흥분하실 일은 아니고요.

○**박용진 의원** 아니, 국민들 안전 문제를 두고서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얘기하시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정부……

○**박용진 의원** 5년간 조사만 하고 계세요,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 여러 가지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차량……

○**박용진 의원** 결과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차량 제작 결함이 급발진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계속 조사 중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것은 다른 나라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미국도 아마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58건의 급발진 사고가 있었는데 관련 전문가를 동원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급발진이 차량 제작 결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 결과도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장관님, 무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의무를 방기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2012년부터는 교수와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를 통한 민관 합동조사 그리고 2013년도에는 국회·언론·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열여섯 분이 모여서 공개재현·실연 실시도 했고요, 2013년에는 자동차공학회·기계학회·신뢰성학회 등 전문가 열네 분을 모시고 제3기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의 결과 합리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이 제작 결함에 기인한다는 원인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총 38건에 대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사고기록장치를 통해서 차량의 급발진 추정 사고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국은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있었다는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이런 사고가 나고 신고가 되면 즉시 사고기록장치를 회수해 가지고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렇게 조사에 착수합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전문가적인 식견과 장비를 동원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것들이 차량 제작 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이 났다는 그 관계를 찾지를 못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량 제작 결함이, 차량 급발진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노력을 게을리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결과적으로 무상수리 조치가 아니라 리콜 조치를 했었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될 네 명의 소중한 목숨이 돌아가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한가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동안, 무려 5년 동안 지연된 이 조사 때문에 조사는 종결되고 지연시켜서 현대자동차에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리콜 시정률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 그게……

○**박용진 의원** 그러면 무상수리 시정률은 파악하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리콜이 해당되는 사항이면 저희들은 리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박용진 의원** 리콜을 했으면, 명령을 내렸으면 시정률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한번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저희 의원실에 갖다 준 자료도 파악 안 하고 지금 나와서 대정부질문에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현대·기아차 이런 리콜, 그다음에 공익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조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 리콜 시정률은 법으로 파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무상수리 시정률은 파악을 하지 않아요, 국토부에서요. 결함 있는 차량이 어떻게 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주무부처가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이지 우리 담당 과에는 그런 것들이 다……

○**박용진 의원** 아니, 무상수리 시정률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국토부가.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장관님은?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믿고서 자동차 잘 몰고 다니면 돼요? 지금 우리 의원실에 들어오고 있는 차량 이상 급발전, 차량 결함, 어마어마한 신고 들어오고 있는 건 모르고 계시지요? 저희한테만 갖췄습니까, 국토교통부에도 넣었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조치 제대로 안 취하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우리 국토부에 접수되는 사항들은 즉시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시다. 저희들이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게을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박용진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안전 결함이라든지 자동차 안전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그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박용진 의원** 지금 저하고 장관님하고 똑같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는 지금 자료 없습시다.

어떤 내용을, 아마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로……

○**박용진 의원** 다 드렸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질문 자료를 사전에 알려 주셨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을 건데……

○**박용진 의원** 저한테 친절하실 필요 없고요, 적어도 기본 자료는 숙지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가 하여튼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더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박용진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정부가 검증인력도 부족하고요, 장비 및 기술력도 부족하고 해결 의지도 부족한 게 분명해요. 문제 처리에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다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장관님께 또 묻겠습니다.

현재 리콜 은폐·축소 32건에 대해서 하나도 누락 없이 다 조사 진행하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용진 의원** 혹시 이 중에서 쉐타II 엔진과 관련해서만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쉐타 엔진은 제작 결함이 일단 확정된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28건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1건에 대해서는 리콜을 했고 1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요, 나머지 제작 결함 2건에 대해서는 쉐타II 엔진과 그다음에 전자식 조향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추후 조사 진행 상황, 조사 결과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국토부만 믿고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를 만들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우선 국토부 조사가 지금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되는 대로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



번 그렇게 범정부적으로 TF 구성,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세월호 사고, 가슴기 사고 다 정부가 손 놓고 방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차 결함 은폐 역시 분초를 다루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 합동 자동차 결함 TF 추진하셔서요 그 추진방안 저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발언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하나……

오늘 계속 나와서 질문받으신 것 중의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용진 의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 출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정부조직법상 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가 맞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 제가 직무대행이라는 걸 합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

○박용진 의원 이른바 쌍대행 체제, 혹은 겹대행 체제 이렇게 되는데 헌정 역사상 이런 전례는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그것을 현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뭘 따로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황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예전의 고건 권한대행 체제의 전례를 모범 삼아서 많은 걸 연구하고 준비했다고 그러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것

으로……

○박용진 의원 이번에는 전례도 없어요. 그러면 미리부터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도 법에 규정이 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분명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모두 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좀 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법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자동차 결함 은폐 문제를 세월호 참사나 가슴기살균제 참사와 마찬가지로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 정부의 무능과 방조, 심지어는 사실상의 협조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인재라는 점에서 그 맥락이 사실상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관련된 사안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국민 편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심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북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정태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정태욱 의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고 세계 10대 무역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

지만 최근 경제성장률은 연 2%대에 머물고 전 국민 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 체감 실업률은 40%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성장이 둔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까지 이끌고 수출을 주도했던 대기업이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 처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이 쌓아 둔 150조 원의 현금성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의 역할을 대신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원기 왕성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기업의 오너들은 대부분 재벌 2세·3세·4세로서 창업세대와 같이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나아가기보다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한 저인망으로 국내의 거의 모든 사업 영역을 독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질문을 위하여 유일호 경제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여러 경제부처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경제부총리께서 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태욱 의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태욱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라고 이야기하는 비주력 사업 내부거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태욱 의원 10대 재벌 중에 내부거래가 50% 이상 되는 기업 수가 무려 35%에 달하고 실제로 대기업들마다 홍보회사나 SI회사뿐만 아니라 벤처 영역까지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거의 모든 사업 기회를 독식하고 심지어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하는 대기업 내의 비주력 사업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우선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또 부당지원 방지 이것을 위한 제도를 실지로 도입을 했고 그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됩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실제로 실적도 있고요. 금년에

도 그런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실태점검을 해서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욱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단순히 단속 정도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공정거래법 제 23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태욱 의원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수직적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굉장히 많고 그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계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기업들 간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나 또 각 기업들 간에 우월적인 지위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도급 법 등 6개 법 안에 3배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법의 실손배상 원칙을 좀 과감하게 완화해 가지고 이와 같이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 간에 우월적인 지위남용에 있어 가지고는 6개 법안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굉장히 늘리고 또 배상범위도 3배수가 아니라 10배수 이상으로 과감하게 확대해 가지고 만약 불공정 거래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경우에는 거의 망하게 하는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관부서는 공정거래위입니다마는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현재 6개 법률에 도입이 되어서 일부 말하자면 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징벌적 배상을 어느 쪽으로 더 확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되어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 소위 실 손해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배상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어긋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것이 또 과연 원인이 어떤 측면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거에 하기는 어렵

다고 보지만 어쨌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어떤지 그 효과에 대한 검토도 해 보고 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해서 점진적인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욱 의원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태욱 의원 그리고 또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공정거래위원회이고 그 중요한 수단이 전속고발권인데 전속고발권을 2014년에 3개 기관으로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래서 전속고발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2014년 이후에 고발실적이, 요청에 의한, 중기청 등의 요청에 의한 고발실적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많이 되지 않은, 3년도 채 안 됐고 2년이 좀 지난 셈이…… 3년이 좀 지난 셈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고발요청권을 확대,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도 한번 이 효과를 보고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태욱 의원 주관 부서장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경제정책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태욱 의원 그다음, 지금 중요한 현안으로 대기업들의 현금성 사내유보금이 현재 150조 원이 쌓여 있고 투자를 잘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경영권이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용진 의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경영권 자체를 소액주주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러 건이 지금 제안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법 개정안 중에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 이사를 분리 선정하는 이런 안이 제안되어 있고 또 집중투표 의무제를 제안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만약 개정이 실현이 된다

면 예전에 KT&G 같은 경우에는 칼 아이칸 그리고 또 SK 같은 경우는 소버린, 옛날에 삼성물산 같으면 헤르메스 같은 사례에서 엄청나게 경영권을 흔들어서 놓고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빼갔습니다. 물론 일부 경영투명성에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진짜 더 또 어떤 개정이 된다면 다국적 투기자본들에 의해서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국부 유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이것이 기술적으로는 상법의 영역이고 법무부장관의 영역입니다마는 이것은 경제 전반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한번 심도 있게 여러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저희도 하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상당히 굉장히 이것을 나름대로 경제부처 간에는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소위 외국의 이른바 투기자본이라는 그런 펀드, 자본들의 공격 대상으로 만든…… 쉽게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감사위원 문제, 분리선출 문제도 이것이 이른바 1주 1표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명해야, 경영권, 대주주의 경영권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행사가 되어야 되고 법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과도하게 침해를 받는다는가 이런 것은 또 동시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욱 의원 그리고 또 이번 야당이 제안한 안에는 노동자추천이사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정태욱 의원 스웨덴 같은 북유럽에는 노조가입률이 70%, 80%, 90%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노조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조가입률이 10% 내외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노조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공기업 노조나 또 대기업, 그러

니까 재벌회사 정규직 노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 장사라고 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 귀족노조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노조들에게 경영권까지 더 붙여줬을 때 그 폐해라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또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한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아닌 측면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한 10% 정도의 조직률을 가지고 있는 노조가 과연 주주로서의 이런, 주주 대표를 가지고 있는 정말 주주들과의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영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태욱 의원**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정태욱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 중에는 자사주 분할 금지와 자사주 처분을 규제하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이 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당시 재벌 문제의 가장 큰 문제였던 순환출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것인데 지금 이제 와서 제안된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대로 하면 지주회사 전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제를 권고해 놓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그것도 못 하게 한다……

오히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기자본에 대해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차등의결권이나 황금주나 포이즌필 같은 여러 장치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소액주주운동이라거나 그런 신자유주의운동, 거기에 막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해 가지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의원님이 여

러 가지를 같이 말씀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봐야,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을 견제하는 만큼의 그만큼에 그 반대급부적인 그에 대한, 견제에 대한 견제장치도 같이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한쪽에게만 쏠리는 조치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의 어떤 좋은 제도의 취지를 공감한다고 할 때는 과연 그 제도가 나올 수 있던 그 반대에는 뭐가 있는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어의 수단이 있으면서 또 공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M&A에서의, 공격이라는 표현이 뭐합니까라는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양쪽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데 한쪽의 제도가 좋으니까 한쪽의 제도만 덜컥 도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또 지금의 제도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보든지 이런 것을 정말, 똑같은 얘기가 됩니까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정태욱 의원** 야당이 제안한 안들이 또 일면의 타당성도 있으니까 반대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까지 같이 제안을 하셔서 가지고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욱 의원** 부총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체감 청년 실업률 40%가 넘는 현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선에 나선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정부의 돈, 즉 세금을 건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올바른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그냥 세금 나눠 주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잘못된 대기업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와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을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어 현금성 사내유보금 150조 원이라는 큰돈을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경영권을 흔들고, 외국 투기자본으로 국내 기업을 경영권의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논쟁이 있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정말 국가를 위하여 또 우리 기업들을 위하여, 우리 경제를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되는 2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말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심재철 정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 의원(266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여상규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주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철희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원 진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하 태 경  
 한 정 애    홍 문 중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흥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97인)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고 용 진    광 상 도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진    김 광 립    김 광 수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병 옥    金成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재 경  
 김 종 대    김 철 민    김 한 정    김 해 영  
 노 회 찬    문 미 옥    민 흥 철    박 경 미  
 박 남 춘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주 민  
 박 준 영    박 찬 대    백 혜 련    변 재 일  
 서 형 수    송 기 석    송 기 현    송 영 길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심 재 권  
 안 철 수    양 승 조    어 기 구    오 체 세  
 우 상 호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은 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소 하    윤 중 오  
 윤 후 덕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석 현  
 이 용 주    이 원 옥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종 명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현 재  
 인 재 근    장 석 춘    전 재 수    전 희 경  
 정 동 영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용 기  
 정 운 천    정 진 석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최경환(국)    최 연 혜    추 경 호  
 추 혜 선    하 태 경    한 정 애    황 영 철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32인)

김 관 영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병 관  
 김 선 동    김 성 원    김 승 희    김 정 우  
 김 중 로    김 한 표    남 인 순    문 진 국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용 진    박 주 현  
 신 용 현    양 승 조    오 신 환    오 체 세  
 유 은 혜    이 우 현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현 재    임 중 성    장 정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운 천    정 태 옥    최 연 혜

○청가 의원(19인)

권 성 동    김 기 선    김 부 겸    김 종 훈  
 민 경 옥    박 주 선    서 영 교    심 상 정  
 안 민 석    엄 용 수    염 동 열    이 용 득  
 이 용 호    이 철 규    전 혜 숙    지 상 옥  
 천 정 배    최 명 길    함 진 규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우    윤    근  
 입 법 차 장    진    정    구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    일    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    재    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    형    환  
 국토교통부장관    강    호    인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석

○출석 정부위원

공정거래위원장    정    재    찬  
 금융위원장    임    중    룡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보	정진석	.	새누리당	2017. 2. 7.
	.	주호영	바른정당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헌법개정 특별	김광립	최교일	새누리당	2017. 2. 7.
	안상수	이종배		

○의안 제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김학용·경대수·이종명·박순자·김종대·전혜숙·김종석·홍문표·유의동·김영우·장제원 의원 발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권성동·여상규·김영우·김재경·김성태·이종구·주호영·이진복·하태경·장제원·정양석·박인숙·이군현 의원 발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권성동·여상규·김영우·김재경·김성태·이종구·주호영·이진복·하태경·장제원·정양석·박인숙·이군현 의원 발의)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권성동·여상규·김영우·김재경·김성태·이종구·주호영·이진복·하태경·장제원·정양석·박인숙·이군현 의원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권성동·여상규·김영우·김재경·김성태·이종구·주호영·이진복·하태경·장제원·정양석·박인숙·이군현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강창일·정재호·신창현·안규백·이종걸·윤관석·김철민·남인순·인재근·박정·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6건 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윤상직·이현재·김석기·박명재·윤종필·신보라·김상훈·송희경·김종석·윤재욱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윤재욱·유재중·김상훈·김도읍·주광덕·윤영석·김정재·강효상·박명재·이철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김광수·김종희·정동영·조배숙·이용호·권은희·황주홍·김삼화·정인화·이태규 의원 발의)

2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도종환·조승래·윤후덕·노웅래·김정우·신창현·민병두·민홍철·황희·서영교·전재수·박경미·김성수·김상희·손혜원·오영훈·박홍근·김민기·조정식·김현미·김영춘 의원 발의)

2월 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전해철·홍익표·황희·박정·소병훈·박찬대·오제세·윤관석·박홍근·민홍철·정성호·김정우 의원 발의)

2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김학용·경대수·백승주·이종명·김종석·홍문표·유의동·김영우·정운천·김무성·전희경 의원 발의)

2월 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박찬우·김태흠·김용태·박덕흠·이명수·박성중·이우현·신상진·김선동·문희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장정숙·김영호·남인순·권은희·김정우·윤관석·김영진·김민기·전혜숙·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2. 7. 정부 제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박찬우·김태흠·김용태·박덕흠·이명수·박성중·이우현·신상진·정용기·김선동·문희상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황주홍·이종걸·이찬열·민홍철·이개호·강창일·조배숙·유성엽·윤소하·박정 의원 발의)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황주홍·이종걸·이찬열·김중로·민홍철·이개호·강창일·조배숙·유성엽·정인화·윤소하·박정·윤영일 의원 발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황주홍·이종걸·이찬열·이개호·강창일·조배숙·유성엽·정인화·윤소하·윤영일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2. 7. 민경욱·김현아·김정재·金成泰·이은권·송석준·송희경·엄용수·이양수·

문진국 의원 발의)

2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2017. 2. 7. 어기구 · 김경진 · 이찬열 · 민병두 · 홍의락 · 김성수 · 박정 · 민홍철 · 윤관석 · 김병욱 · 소병훈 · 김영춘 의원 발의)

2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017. 2. 7. 박성중 · 엄용수 · 이진복 · 박명재 · 김현아 · 윤영석 · 장제원 · 강석호 · 이종구 · 금태섭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 발의)

(2017. 2. 7. 박찬우 · 김태흠 · 김용태 · 박덕흠 · 이명수 · 박성중 · 이우현 · 신상진 · 김선동 · 문희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017. 2. 7. 박성중 · 박명재 · 김현아 · 엄용수 · 이종명 · 윤영석 · 장제원 · 강석호 · 백재현 · 이종구 · 김중석 · 금태섭 · 윤재옥 의원 발의)

2월 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박찬대 · 김경진 · 김병욱 · 박용진 · 정성호 · 김해영 · 채이배 · 추혜선 · 손혜원 · 김상희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박용진 · 민병두 · 최명길 · 강병원 · 박찬대 · 김관영 · 김해영 · 정성호 · 이종걸 · 이철희 의원 발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2017. 2. 8. 김동철 · 도종환 · 정인화 · 윤영일 · 송기석 · 김종민 · 김종대 · 김관영 · 박주현 · 추혜선 · 천정배 · 이동섭 · 김광수 · 김경진 · 신동근 · 황주홍 · 정동영 · 권은희 · 원혜영 · 최경환(국) · 김수민 · 장정숙 · 조배숙 · 박지원 · 강창일 · 박준영 · 유성엽 · 장병완 · 박주선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전재수 · 이종걸 · 안민석 · 최인호 · 도종환 · 김해영 · 조승래 · 서형수 · 유은혜 · 손혜원 · 박재호 · 유성엽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민홍철 · 서형수 · 최인호 · 김관영 · 이원욱 · 변재일 · 이종걸 · 김경수 · 조정식 · 이개호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남인순 · 김삼화 · 김상희 · 전해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장정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 이재정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남인순 · 김삼화 · 전해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장정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 이재정 의원 발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이양수 · 황영철 · 김도읍 · 지상욱 · 김기선 · 김태흠 · 홍문중 · 황주홍 · 김종대 · 안상수 · 이종배 · 김영춘 의원 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2. 8. 정부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김태년 · 도종환 · 박정 · 김정우 · 김종민 · 윤후덕 · 홍의락 · 정성호 · 이개호 · 윤관석 · 박광온 의원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권은희 · 김광수 · 김관영 · 김경진 · 김중희 · 박지원 · 신용현 · 유성엽 · 윤영일 · 이동섭 · 장정숙 · 정동영 · 주승용 · 황주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남인순 · 김삼화 · 전해숙 · 박주민 · 진선미 · 정춘숙 · 서영교 · 신용현 · 한정애 · 이정미 · 권미혁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7. 2. 8. 위성곤 · 이원욱 · 이개호 · 김현권 ·



김철민 · 윤영일 · 윤후덕 · 진선미 · 김한정 · 이용득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2. 8. 위성곤 · 이원욱 · 이개호 · 김현권 · 김철민 · 윤영일 · 오제세 · 윤후덕 · 진선미 · 김한정 의원 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2. 8. 위성곤 · 이원욱 · 이개호 · 김현권 · 김철민 · 오제세 · 윤후덕 · 진선미 · 김한정 · 이용득 의원 발의)

이상 1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철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 발의)**

(2017. 1. 13. 김규환 · 김석기 · 엄용수 · 윤종필 · 송석준 · 김도읍 · 백승주 · 최교일 · 전희경 · 홍문중 의원 발의)

2월 7일 발의자 철회 요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 김진태 · 여상규 · 정갑윤 · 황영철 · 박명재 · 이현재 · 권성동 · 이양수 · 이종명 · 전희경 의원 발의)

2월 8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청원**

(2017. 2. 8. (사)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현찬으로부터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민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원**

(2017. 2. 8. 이지문 외 4인으로부터 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질문서**

(2017. 2. 7. 위성곤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허위보고 및 기만행위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7. 2. 8.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 되었음

2017. 2. 7. 문화체육관광부

2017. 2. 7. 문화재청

2017. 2. 8. 농림축산식품부

2017. 2. 8. 국가안보실

2017. 2. 8. 대통령비서실

이상 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